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인 쇄 2009년 1월
발 행 2009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봄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늘봄플러스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8~2009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연례정세보고서 ; 2008)

ISBN 978-89-8479-492-4 93340 : ₩6000

통일 환경[統一環境]

남북 관계[南北關係]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9000191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 안보정세	3
가. 미국과 일본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4
나.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7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적 협력과 갈등	10
라. 전망	13
2. 북핵문제	16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21
가. 한미관계	21
나. 한중관계	26
다. 한일관계	31
라. 한러관계	34
II. 북한정세	39
1. 대내정세	41
가. 정치	41
나. 경제	47
다. 사회	52
라. 군사동향	57

2. 주요 대외관계	63
가. 북미관계	63
나. 북중관계	66
다. 북일관계	72
라. 북러관계	76
3. 대남동향 : 체제유지를 위한 通美封南, 通民封官	81
Ⅲ. 남북한관계	87
1. 남북대화	89
가. 남북 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	89
나. 남북대화 전망	91
다. 경제분야회담	94
라. 군사분야회담	96
2. 남북교류협력	100
가. 경제분야	100
나. 사회·문화분야	105
3. 인도주의 사안	108
가. 대북지원	108
나. 이산가족문제	110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112
라. 북한인권	117
부록: 2008년 주요 사건일지	123

I

동북아정세 ...



1. 동북아 안보정세

2008년에도 미·일·중·러 동북아 4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의 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력증강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력강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처음 미사일 공중 요격실험을 실시('07.12.18)하여 성공했다. 그 후 일본은 도쿄 인근 요코스카시 육상자위대 기지들에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1.30)하고 MD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전시켜 왔다.

러시아는 미·일이 개발하고 있는 MD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최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불라바'를 시험발사(9.18)하는 등 최첨단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며 잠수함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중국은 세 번째 유인우주선인 '선저우(神舟) 7호'를 발사(9.25)함으로써 국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인도는 달 탐사위성 '찬드라얀 1호'를 발사(10.22)하여 중국·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군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우주경쟁이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전세계 군사비의 45%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¹ 그러나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2004~2007년

¹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사이 미·일 대 중·러 양축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세력확장 경쟁은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 동북아 정세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군사·안보문제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외교적 협력이 두드러진다. 미·러 관계는 MD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양국 간에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가. 미국과 일본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미국은 2008년 초부터 대통령 선거체제에 들어섰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기 예비선거 과정을 통하여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과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였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집권하면 16개월 이내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서 매케인은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옹호한 반면, 오바마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강조하였다. 그 이외의 이슈들에 관해서도 양당간 각기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선거쟁점으로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

미국 5,470억, 영국 597억, 중국 583억, 프랑스 536억, 일본 436억, 독일 369억, 러시아 354억 등의 순서로 발표되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으며,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자 금융불안이 점차 증폭되었다.²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으로 2008년 9월 미국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자 재무부는 양대 모기지 업체에 공적자금을 투입(9.7)하여 정부관리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9.15)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로 확산되었다. 세계 최대보험회사인 AIG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는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패, 미국의 경기침체 등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민주당에 유리한 분위기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선사상 최초의 흑백 대결구도로 인해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박빙의 대결을 보이던 선거 판세는 9월 중순 금융위기가 최대 선거이슈로 부상하자, 매케인은 부시 행정부와 더불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결정적인 승기를 장악한 오바마 후보는 11월 4일 선거에서 매케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²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2002~2004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였다. 그러자 저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붐이 형성되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였고, 모기지 회사들 사이에는 대출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편법적인 대출이 성행하였다. 한편 금융감독기능이 전산화된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투자은행·사모펀드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를 상승으로 금융불안이 발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9』(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12.1) 참조.

대선과 함께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여 상·하원 모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보인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치안 안정 등 중동지역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정책을 추진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 호가이도 도야코에서 개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7.6)하였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일본 정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대변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불안정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07.7.29)에서 민주당에 패배하자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임하고 후쿠다가 신임 총리로 선출('07.9.25)되었다. 그런데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견제로 정국 주도력이 약화된 후쿠다 총리도 1년 만에 다시 전격 사임하였다.

새로 취임(9.24)한 아소 다로(麻生太郎)는 자민당의 전통에 따라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은 미국측에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였으나, 미 국무부는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선언(10.11)하였다. 일본인들은 미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나.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3.5)하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유임을 승인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집권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며 ‘조화로운 사회, 조화로운 세계’를 구호로 내걸었다. 그러나 2주 동안 지속된 전인대 회기 중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1천여 명이 폭력시위를 전개(3.14)하였고 이에 중국 경찰이 발포하여 유혈사태가 확산되었다. 중국 정부는 라싸에 군경 3천 여명과 탱크 등을 파견하여 질서회복에 나섰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중국의 티베트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표시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이콧 할 것을 각국정부에 촉구하였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초청 기념행사 불참문제를 유럽연합(EU)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3.18)하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통화하여 티베트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폭력을 자제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대화할 것을 촉구(3.26)하였다.

중국 정부는 8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대만 총통선거(3.22)에서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승리하여 8년 만에 민진당에서 국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달성되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샤오완창(蕭萬長) 대만 부총통 당선자와 회담(4.12)하고, 민진당 집권 이래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양안관계를 개선하기로 약속하였다.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천원린(陳雲林) 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은 베이징에서 9년 만에 회담을 개최(6.12)하고

각기 상주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양측 대표는 다시 대만에서 회동하여 전면적 통상·통우·통항 등 3통 실시에 합의(11.4)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5.7), 양국관계의 ‘전략적 호혜관계’ 발전 및 동 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의 티베트 정책을 이해하였고, 중국은 일본의 유엔에서의 역할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는 청소년 교류 및 군 장교 상호방문 등을 포함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체화한 70개 항목을 언론에 공동 발표하였다. 그 후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동 중국해 영해 분쟁지역 가스전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6.18)하였다.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도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 매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개최(6.17~18)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측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협력하고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측 대표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은 지난 3년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상한 것을 치하하고 환율 절상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담이 끝난 후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원만한 성공을 축하하였고, 중국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확인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8.8)에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 대통령 등 90여개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였다.

한편, 2008년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갈등이 증폭되었다.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국가자문회의에서 NATO의 동유럽 확대와 미국의 폴

란드와 체코에 MD 체제 배치 계획을 비난하며, 러시아가 최첨단무기를 개발하여 새로운 군비경쟁 도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2.8)하였다. 2008년 2월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분리독립 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을 용인할 수 없다는 세르비아의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코소보의 분리독립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고 경고하였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3.2)에서 메드베데프(Dmitri Medvedev)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3선 금지 헌법조항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에 취임(5.7)한 후 푸틴은 총리에 임명되어 러시아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푸틴의 대외정책을 이어 받아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BRICs) 4개국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개최(5.16)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정상회담을 개최(5.23)하고 ‘중대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5.24)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UN 및 아·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일방주의와 패권반대, 테러·마약 등의 위협에 공동대응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루지야 군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자를 선제 공격하자 러시아는 즉시 그루지야에 침공(8.9)하여 남오세티아 지역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가 그루지야의 휴전 제의를 거부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휴전하고 러시아군을 즉각 철

수할 것을 요구(8.13)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에 자극을 받은 폴란드는 미국과 MD 체제 배치에 최종적으로 합의(8.14)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루지야와 휴전협정에 서명(8.16)하고,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승인(8.26)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진영은 러시아의 남오세티야 독립 승인을 비난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8.28)에서 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회원국들이 남오세티야 독립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들은 그루지야 사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브라질·베네수엘라·쿠바 등을 연이어 방문(11.25~27)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방문기간에 러시아 해군 함정이 베네수엘라 해군과 합동군사훈련(12.1~3)을 위해 입항하였다. 러시아 해군의 카리브해 출항은 NATO의 동유럽 확대 및 미국의 MD 체제 배치에 맞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적 협력과 갈등

9월 중순 미국의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자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법안을 의회에 요청(9.20)하였다. 미 의회는 금융시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을 거친 뒤 ‘긴급경제안정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10.3)

시켰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캐나다·일본 등 선진국들도 신규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여 국제공조를 가속화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EU·일본 등의 중앙은행은 공동으로 금리인하를 발표(10.8)하였다.

미국이 진원지가 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EU·일본 등 세계 3대 경제축이 중심인 기존 국제경제체제의 결함이 드러났다. 즉, 서방 선진국 모임인 G7만으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G7과 더불어 중국·인도·브라질·한국 등 신흥경제국으로 구성된 G20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11.14~15)하였다.³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드체제(Bretton Woods Institutions)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를 중심으로 한 기존체제를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여하튼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개혁과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 등에 합의하였다. G20 정상회의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 제고, 협력 강화, 국제기구 개혁’ 등 5대 원칙에 합의하고, 47개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금융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영국·브라질과 함께 실무작업을 주도할 리딩그룹

³ G20 회의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사이의 협의를 위해 1999년에 발족하였다. 회원국은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과 BRICs 4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포함한 한국·아르헨티나·호주·인도네시아·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남아공·터키 등 12개 신흥개도국 그리고 EU(의장국)로 구성되어 있다.

(leading group)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말 세계 금융기관들의 연쇄부도 위기는 G20의 정책공조와 각국 정부의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점차 수습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됨에 따라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어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7조 엔에 달하는 추가경제대책을 발표(10.30)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을 기간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등에 투입한다고 발표(11.9)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2009년 1월 신행정부 출범 이후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달러와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을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⁴ 후진타오 주석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11.24)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러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2009~2012년 정치·경제·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미국과 중국도 베이징에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12.4~5)하고 무역·환경·재정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의하였다. 이번 회담

⁴ 중국은 9월말 현재 1조 9,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5,85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미국 정부의 채권을 중국이 더 많이 사주기를 바라고 있다.

에서 미국측 대표 폴슨 재무장관은 중국측에 위안화 평가 절하나 수출 장려금 지급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국측은 미국이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 내 중국의 자산과 투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미·중 대표들은 수출과 금리 등의 문제에 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 달러의 무역금융을 공동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 아소 다로 총리와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12.13)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해 나가며 3국 정상회의를 3국내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국제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 전망

2009년 세계경제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중국·러시아 등 신흥경제권은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해결에 대내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G20 국가들은 IMF체제 개편 등 금융기구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인도·한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중국·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과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2009년 1월 20일 44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다.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부통령 바이든(Joe Biden), 국무장관 힐러리(Hillary Clinton), 국방장관 게이츠(Robert M. Gates),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임스 존스(James Jones)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정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대내외정책에서 중도노선을 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정책에 관해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버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한국 등과의 양자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또한 다자안보협력 틀을 구축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추진방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면 미·일관계는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일본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 정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일관계 강화를 최우선시하며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일본 외교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국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란의 핵문제 해결 및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쌍무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며 이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여 미·중 관계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적

자 개선을 위해 중국 위안화 절상 및 시장개방을 강조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일본·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금융위기 극복 및 세계적 핵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NATO의 동유럽 확대 및 미국의 폴란드·체코에 MD 체제 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및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BRICS)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주도하며 경제·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질서의 다극화 구호를 내세우며 미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석유가격 하락과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미국과 협력 및 갈등의 수준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김국신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북핵문제

2008년의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 북·미 양자 회담에 의해 압도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능화와 신고가 예정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북·미 싱가포르 회동(4.9)으로 북핵신고에 대한 돌파구가 열렸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5월 초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 가동기록 18,800여 페이지를 확보(5.8~10)했다. 북한의 핵신고(6.26) 이후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2)에서 검증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시설방문, 문서 검토, 기술자 면담)에 합의했으나, 이 역시 북·미간 사전 조율된 내용을 추인한 것에 불과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 반발하여 취한 불능화 중단(8.26) 및 재처리시설 재가동 통보(9.24) 등의 조치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한 것도 6자회담이 아니라 북·미 대화였다.

결국 2008년은 북핵회담의 축을 북·미 직접대화로 옮기려는 북한의 전략이 결실을 거두면서 6자회담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은 이 회담을 만든 부시 행정부에서 이미 무기력해진 상황이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미 회담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6자회담이 2008년도에 거둔 성과라면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의장국인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했고,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방법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제공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주관했다. 그러나 신고와 불능화를 둘러싼 난관이 조성되면서 한국의 역할은 빛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비핵화 및 다자안보 실무그룹도

북·미 대화에 압도되어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8년도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도 유감을 표명했듯이(6.26), 북한의 핵신고 내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규정한 2·13 합의에도 위반되었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핵 무기,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및 시리아 핵확산 문제를 사실상 제외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4.19)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신고 3원칙(완전하고 정확하며 검증 가능해야 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이 시리아 핵확산의 증거를 공개했고(4.24), 미국 국가정보국이 “연례위협평가서”에서 북한의 HEU 활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대해서 “중간수준의 신뢰(moderate confidence)”가 있다고 밝혔는데도(2.5) 불구하고, 두 사안이 신고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신고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고내용의 검증에 대한 합의(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 전후 북·미 합의사항) 역시 북한의 플루토늄 활동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하며, 향후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검증 합의 역시 한·미 정상회담(4.19)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검증 3원칙(전면적이고 완전하며 만족할만한 검증)”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2)에서 합의한 검증원칙(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자 면담)은 대북사찰의 기본을 망각한 잘못된 합의이다. 특히 “시설방문”이란 표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통상 “방문”이란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증활동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미국 협상팀이 지난 1990년대 핵사찰 협상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식의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 당초 “5 對 1”의 구도를 기대했던 6자회담에서 실제로는 북한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과 이행을 주도해 나갔듯이, 검증협상도 북한에 의해 끌려 다닌 형국이다.

2009년의 북핵문제는 상당 부분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좌우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이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후보는 북한의 신고서 제출에 대해서 “한발 진전(a step forward)”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서 플루토늄, HEU 및 핵확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고, 제재는 미국의 핵심 수단으로서 북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폐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6.26) 바 있다.

오바마 후보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서도 검증방법에 북한이 동의한 것은 “작은 진전(modest step forward)”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불능화와 검증을 완료해야 하고, 부시 행정부 8년은 북한과의 “공격적이고 지속적이며 직접적인(aggresive, sustained and direct)” 대화의 필요성을 입증했고,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서 에너지 제공을 중단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10.11)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직접적인 고위급의 외교(direct, high level diplomacy)”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미 직접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평양·워싱턴 간

상주연락사무소는 2009년 중에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북핵 폐기 협상의 진전에 맞추어 양국간 외교차관·장관 회담의 정례화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고위급 외교 접촉은 기존 대북정책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며,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핵포기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활발한 대화가 바로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냉전시대에 적국 소련과도 대사관을 개설하고 경제교류를 하면서 정상회담도 빈번하게 했다고 말한다. 직접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적이 친구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야 말로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재의 채찍을 가할 사람이다. 자신이 선거유세 중에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제네바 합의로 북한에 한 번 당한 민주당에서는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직접대화가 관계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대화는 언제든지 제재로 돌변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6자회담의 경우, 회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북·미 직접대화가 강화되는데 반비례하여 6자회담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2·13 합의를 기점으로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先 북·미 합의, 後 6자 추진”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직접대화에 대해서 중국·러시아는 환영하고 일본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드러내 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전제로 김정일과 만날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및 동북아 안보체제 실무그룹이 북·미 직접대화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 핵폐기 협상이 시작되면, 에너지 실무그룹은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에 드는 자원 마련과 대북 경제지원과 보상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 전성훈 ·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까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한미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 수준의 당국 간 회담이나 접촉 등을 통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2008년 4월 15~19일 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미 정상은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8월 5~6일 간 서울을 답방했다.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이외에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장 회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미래지향적 발전, 북핵 및 대북정책 관련 협력, 범세계적 이슈 관련 파트너십 강화 등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켰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양국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워싱턴에서 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제19차 회의(9월, 서울)까지 진행하였다. SPI에서는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 지위 향상 등 동맹 재조정 문제와 북핵 문제, 평화유지(PKO) 활동 등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는 방위비분담 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5차례 진행되었다(1차: 7.21, 워싱턴, 2차: 8.28~29, 서울, 3차: 9.24~25, 워싱턴, 4차: 10.29~30, 서울, 5차: 11.19~20, 호놀룰루).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12월 17일 차기 특별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합의된 차기 특별협정의 주요내용은 유효기간을 2009~2013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현금 지원 군사건설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10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략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 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초 2008년 말을 목표로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부지확보의 지체, 건설계획의 조정 등으로 인해 향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전 완료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아래서 타결된('07.6.29)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

부는 2008년 1/4분기 중 미국 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하여 국내 일부 소수 세력의 격렬한 반대 시위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한미 양국은 각각 FTA 발효를 위해 국내적 비준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말까지 한미 양국에서 모두 비준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2008년 11월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8년에도 북핵 문제는 한미 간 정책협력의 핵심적 사안이었다. 2007년 10월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핵 불능화 및 핵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마무리되었어야 했으나, 2008년 말까지 종료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불능화 완료는 지체되고 있으며, 핵 신고도 신고와 동반해야 하는 검증의정서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계속 현안으로 남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 완료도 일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다. 한미 양국은 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3월),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방한(2월, 6월)을 비롯하여 ARF 외교장관회의(7월) 등 여러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북핵 문제는 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한국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미국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간, 한국의 북핵 외교기획단장-미국의 6자회담 특사 간 등 실무협의를도 진행하여 정책을 조율하였다. 2006년 11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는 제3차 회의를 9월 2일 워싱턴에서 가졌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국 측이 요구해왔던 사증(비자)면제와 관련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미관계가 이전 정부 아래서의 갈등적 관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한미동맹관계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이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갈등관계도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었다.

2009년도에는 1월 20일 미국에서 8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을 공약하고 있으며, 공세적인 대북 개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핵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강화할 것임을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NPT 체제의 규범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외교안보 진영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에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정책 협력을 매우 중시할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2008년에 이룩한 한미동맹관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와도 정치리더십 간의 신뢰 형성 등 양자관계를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진보적’인 반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특히 대북정

책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존중 등을 기치로 하는 미국의 '진보'와 한국의 '보수'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계' 비전에 기반한 북한의 비핵화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공약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직접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세적 기회를 찾으려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거나 미·북 대화의 수준을 격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중시할 것이다. 한·미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의 행동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21세기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동맹비전의 작성을 위한 협력은 지속될 것이고, 한·미간에 이미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한·미연합방위구조의 전환 등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1세기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강화 문제와 한국의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역할 증대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이 어떻게 공유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도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변화된 양국의 능력과 위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맹관계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한·미 관계가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의 측면이 강

하다면, 경제·통상 차원에서 한·미관계는 다소의 조정과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호주의 무역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은 일정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통상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과제이다.

● 박영호 · 국제관계연구실장

나. 한중관계

2008년의 한중관계는 조정과 진전이 교차한 한 해로 평가된다. 중국은 2007년 10월 17차 당 대회에 이어 2008년 3월 11기 전인대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2기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정권교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2.25)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외 및 대북전략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조정은 중국의 우려와 한중간의 이견을 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리 협력을 포함한 양국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은 한중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진전으로 이어졌다.

2008년 1월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1.13~16)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북핵 신고 문제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국의 신정부와 입장을 조율하였다. 한국은 비중 있는 인사인 박근혜를 특사

로 파견(1.16~19)하며 답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한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고, 대북정책에서도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평화변영정책과 차별성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미관계 강화, 한미일 3국 공조 확대, 주한미군의 역할 강화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의 상대적인 약화를 우려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의식한 한국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변 4국 순방외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3.20~22)하기도 했다. 양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발전에 관한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양국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의 신정부는 경제적 실리는 물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미일 관계의 강화를 견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2008년 5월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격상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이 각 부문에 걸쳐 총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동통신과 에너지 분야 협력, 과학기술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스촨(四川) 대지진 현장을 전격 방문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중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8.8)에 참석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8.9)을 갖는 한편, 올림픽 폐막 직후 한국을

방문(8.25~26)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는 등 양국관계의 진전을 도모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였다. 즉, 2010년 내 2,000억 달러 교역 달성과 정치 분야 5개, 경제 분야 17개, 인적 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 6개 등 총 34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전략적 관계’에 걸맞은 군사교류 확대와 외교부 간 전략대화의 상설화에도 합의했다. 실제로 중국은 기존의 부국장급에서 임명되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국장급인 청용화(程永華)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임명(10.26)하였고,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도 개최(12.12)되었으며, 훈련 목적의 군함, 전투기 출동시 상대국에 통보함으로써 상호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12.20)하였다.

이러한 양자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4.9~10)에 이어, 새로 임명된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5.13~15)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하고 북핵 2단계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도 협의하였다. 북한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6.26) 이후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0~12)에서는 북핵 신고와 검증문제를,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한다는 발표(10.11) 이후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12.8~11)에서는 검증방법과 대북 중유지원 문제의 합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양국은 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의(7.23), 7차

ASEM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10.25)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협력을 전개하는 한편, G20(11.14~16), APEC 정상회담(11.22~23) 등을 통해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12.13)에서는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양국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814억 달러, 대중 수입액은 673억 달러로, 같은 기간 수출은 22%, 수입은 31%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흑자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긴밀한 경제관계를 제도화하려는 한중 FTA에 관한 논의도 지속하였다. 전년부터 개시된 한중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의 제4차 회의(2.15~20)와 제5차 회의(6.10~14)가 속개되었고, 양국 정상은 적극적 검토에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양국 간의 이견 조정 실패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최종 결론 도출은 지연된 상태이다.

이처럼, 한중관계에서 2008년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해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발생했다. 즉, 양국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대된 교류협력은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이라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5.27)과 중국 관영매체들의 비판적인 논평, 중국

해양국 웹사이트(海洋信息网: www.coi.gov.cn)에 게재된 이어도의 중국 영유권 주장(8.13) 등이 있다.

이밖에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한국에서의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 스촨 대지진 당시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의 악의적 댓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한국인 해경의 사망사건, 올림픽 응원에 보여준 중국인의 반한 감정 및 한국에서 공자를 한국인으로 생각한다는 일부 중국 언론의 오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예는 양국간의 교류협력으로 파생된 문제로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마찰 및 갈등요소로 작용하였다.

2009년의 한중관계는 경제위기 극복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제금융위기의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전망이어서 경제위기 극복에 유리한 주변 환경의 유지·창출에 전략적 목적을 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과 역내 군사안보적 갈등보다는 경제안보적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도 기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구축을 향한 진전이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보다 3대 무역상대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할 것이고, 한국 역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실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중 간 경제협력관계는 확대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호실리 추구하고 상호 이해·신뢰부족으로 파생된 마찰도 증가할 것이다. 한미 관계와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력이 긴밀하게 확대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중 양

국은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과 사안별 공조를 넘어서서 외교안보,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과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의 협조가 점차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 전병곤 ·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다. 한일관계

한일관계는 2008년에 접어들면서 관계개선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일본 정계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날, 후쿠다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100여명의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취임 직후에는 첫 정상회담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4월에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약 3년 4개월 만의 일본 방문이다.

방일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재일동포 리셉션,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 일왕 면담, TBS 주최 ‘일본 국민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신시대’ 개척에 합의하였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인적교류의 저변확대에 역점을 둘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서틀외교의 복원과 정상회담의 활성화,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확인과 상대방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 균형있는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TV를 통하여 일본국민들과의 대화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민영방송인 TBS의 특별프로그램 ‘일본 국민 100인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바람직한 한일관계, 양국 관계의 미래를 짚어질 한·일 젊은 세대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르다”며 “후손에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과거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없지만, 미래는 양국이 힘을 합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성숙된 동반자 관계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었으며, 4·21 정상회담을 ‘서틀외교’의 제1탄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가 한계의 틀을 벗어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일관계는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원만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재차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5월 18일, 일본 국내에 ‘새학습지도 요령해설서’의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한 후, 동년 7월에 들어오면서 점차 갈등의 불씨로 부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년 5월 1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청와대는 동년 7월 13일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라고 선언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의 전반을 고려하여 독도문제를 심각한 갈등의 불씨로 삼지 않았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우려와 경고를 계속 표명하였다. ‘새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 명기는 극우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외무성이 이를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표현이 당초보다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 등 우회적 표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지난 참여정부의 시절처럼,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간의 갈등이 증폭·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한·일관계가 신뢰회복과 더불어 개선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즉, 후쿠다 정권의 대한관계 개선정책은 대중관계와는 달리 한계가 있었다.

2008년 9월, 후쿠다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아소 다로 전 간사장이 신임총리로 선출되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한·일관계는 중요한 협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소정권은 2008년 12월 13일에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한·중·일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한중 등 양자간의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확대가 발표되었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경제위기로의 확산에 대한 3국 공동대응,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 지역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 성명」,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 관리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 등이 채택·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추구, 북한의 검증체제 수립의 비협조자세에 대한 유감 표명, 아시아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가속화를 위한 협력 등에 관해 한·중·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내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지향해 한·일간의 교류·협력 강화, 경제교류의 확대 및 한·일 FTA 협상 재개 등이 논의되었고, 북한 핵폐기를 위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한·일 인식의 공유,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에 대한 한·일의 인식 공유 등이 강조·확인되었다. 아울러 애초 의제에 없었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력 문제도 논의되었다.

한·일관계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향해 매우 중요한 협력의 시기에 있는 것이다.

- 배정호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관계

한·러는 양국의 대통령 취임과 정상회담 개최, 외무장관 등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고 북핵 폐기와 경협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에서 부분적인 갈등이 노정되었다.

이명박 당선인은 동부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된 한·러간 협의 진행의

상세한 파악 및 협의를 위해 특사(이재오 의원)와 6명의 특사단을 러시아에 파견(1.20~25)하였다. 이재오 특사는 주코프(Zhukov) 부총리, 라브코프 외교장관,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동부 시베리아에서 연해주 일대에 이르는 동북아시아를 21세기 평화와 경제가 함께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2.25)에 줍코프(Zubkov) 러시아 총리가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의 축하와 안부인사를 전하고 양국 간 투자와 교류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서울에서 외교차관 및 담당 실국장 연례 상호 방문,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문화·영사 분야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2009년 외교부 간 교류 계획서』에 서명(3.28)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5.7) 축하를 위해 첫 전화통화(5.20)를 하고 양국 간 투자 증대, 철도분야 협력, 북핵문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조속한 방러를 기대하였다. 도야코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7.9)이 개최되었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싱가포르에서 ARF를 계기로 한·러 외교장관 회담(7.23)과 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9.10)을 각각 개최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몇 가지의 갈등도 노정되었다.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였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방러시 대미·대일·대중 특사와는 달리 국가수반인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소위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2006.3.19)’과 관련, 우리 법원이 관련자 120여 명 전원 에 무죄판결(2008.2.19)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함으로써 러시아 정부

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탈북자·노동자·외교관과 접촉한 한국인 3명을 강제 출국(3.7)하였고 한국 최초 우주인 고산씨가 「러시아연방 우주청」에 의해 이소연씨로 전격 교체(3.10)되었다.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정부의 내사 사실을 인지한 러시아 정부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공한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면서 진상규명을 요청(4.15)하였다. 항의공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주러 한국대사관의 정보외교관 4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 사건은 한·러 관계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기와 같은 한·러 양국 간 실용주의 외교에 기초한 양자관계 발전과 전반기 동안 노정된 갈등의 해소 필요성 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고 한·러 정상회담(9.29)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 다양한 분야의 양자협력 확대,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남북대화의 중요성 확인 등 10개 항에 달하는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래지향적 대러 관계 확립, 북핵문제 해결의 공감대 유지, 호혜적 실용외교 추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군사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한·러 양자간 및 6자회담을 통해 지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4.7)에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하

는 데 러시아가 지속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만나(5.29) 북한의 핵 신고 단계 마무리 및 핵 폐기 3단계 협상 개시 등 북핵과 관련한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양국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스크바에서 재차 회동(10.23)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과 6자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은 북핵 불능화 2단계 마무리와 관련,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며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에서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개최(11.20)되어 국방정책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08년도 군사교류협력 현황 및 2009년도 군사교류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제면에서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의 방한(5.20),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BEPA) 공동연구그룹 제2회의(7.8), 도야코 G8 정상회담(7.8),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RF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7.23), 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9.10) 등 양자 및 다자간 회의를 통해 한·러 고위인사들의 교류, 투자, 철도협력, 가스관 연결,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은행 러시아법인」은 러시아 진출 이후 첫 개발금융투자 사업으로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인 「한·러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3,600만 달러를 지원(5.20)하기로 하였다. 극동 지역의 나훗카에 한국선박 전용 항구를 건

설하기 위해 「부산 항만공사」와 러시아 측이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는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10억 톤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하기로 결정(6.24)하였다. 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9.10)에서는 통상투자진흥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 양국 협력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2009년 한·러 관계는 2008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러 공동성명’과 「2008~2009년 외교부간 교류 계획서」에 따라 양국 고위인사간 상호방문이 확대되고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되며 문화·영사 분야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북핵 불능화 2단계를 마무리 짓고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양국 간 공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신설로 우리나라의 대러 에너지 외교가 강화될 것이나, 세계 금융위기 심화와 국제원유가 폭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2009년 경제성장을 3%대 전망 등은 점증되고 있는 한·러 교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여인곤 · 기획조정실장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가. 정치

2008년 북한 정치와 관련 가장 큰 화제는 김정일 위원장 건강문제였다. 9월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9월 9일 행사에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돌기 시작한 이후 명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정부는 김 위원장이 ‘9·9절’ 행사에 불참하자 그의 건강이상이가 사실임을 밝혔다. 물론 북한은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단지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의 폭양, 굶은 날씨” 속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시찰 행보를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주장, 과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정도였다.

김정일 건강 이상의 원인은 ‘뇌졸중’으로 알려졌고, 초기에는 ‘사망설’까지 있었으나 10월초 김정일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보도 이후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판단력에는 이상이 없이 북한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였다. 이후 12월 중순경에는 김 위원장의 자강도 지역에 대한 집중지도가 보도되면서 김 위원장 외병과 이와 관련한 ‘중대위기설’은 잠잠하게 되었다.

북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 위원장은 2008년 12월 23일 현재 총 91회의 시찰활동을 하였고, 분야별로는 군부대 시찰 및 군관련 행사 49회, 경제 시찰 26회, 대외 활동 5회, 기타 11회이다. 월별로는 5월이 20회로 가장 많고 8월 14회, 6월 11회, 7월과 12월 9회, 1월과 11월 8회, 4월 7회, 2월과 10월 각 2회, 3월 1회 순이며, 9월엔 외부활동 보

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화두는 ‘일심단결’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 이후이자 정권수립 60주년기념일(9.9)을 앞둔 시점인 9월 3일 ‘로동신문’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역사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역사”라며 김위원장 중심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후 9월 14일 ‘로동신문’은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 강조와 함께 김 위원장이 수 많은 전선과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행했음을 강조하여 그의 와병이 과로에 의한 것임을 은연중 내비쳤다. ‘로동신문’ 9월 30일자는 “김정일 건강이 곧 강성대국”이라는 주장을 폈다.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9월 17일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면서 “이런 단결을 이룩한 나라는 역사의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붕괴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승승장구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9월 23일 북한의 신 세대를 ‘강성대국 건설세대’로 규정하고 “빨치산투사들의 후손답게 ‘연길폭탄정신’의 창조자들의 후대답게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자”고 독려했다. 10월 3일 ‘조선중앙방송’은 전역의 당조직을 동원해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12.24)을 맞아 ‘선군정치’ 고수와 국방력 최우선 강화를 강조하였다. ‘노동신문’은 12월 24일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기념사설에서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며 “누구나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22일 ‘노동신

문'도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군대가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세계정치라는 마차가 어떤 바람을 타고 어떤 길로 질주하건 우리는 선군혁명의 궤도에서 한 발자욱도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김정일 위원장이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과 실시한 지난 9월 5일자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주로 김 위원장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한 것으로서 10월 4일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대학 팀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보도된 이후 김 위원장의 영도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동신문’ 10월 15일자는 “아무리 방대한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단결돼 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은을 낼 수 없고 결국에는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라고 말하여 ‘일심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문은 “일심단결이야말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근본담보”라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12월 8일자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개혁과 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먹이려고 각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로동신문’ 12월 15일자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동지애와 단결을 강조하고 주민들에게는 “배신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새세대 또는 ‘3, 4세대로의 혁명 계승’을 유난히 강조했다. ‘로동신문’ 1월 28일자는 “우리 혁명에서는...혁명의 1세, 2세들이 지녔던 높은 정신력이 3세, 4세에 의해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로동신문’ 4월 12일자는 “항일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역세계 틀어잡고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새 세대를 대상으로 한 혁명전통 교양 강화를 강조했다. ‘로동신문’ 8월 5일자는 강성대국 건설은 물론 사회주의 고수를 위해 ‘혁명전통의 계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2월 3일부터 이틀 동안에 걸쳐 각 도별로 ‘혁명가 유자녀(국가 유공자)대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98년과 2002년 이후 세 번째였다.

외부사조 문제와 관련해서 ‘로동신문’ 1월 31일자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히 짓밟아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협조’와 ‘교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로동신문’ 3월 23일자는 부르쵸아 사상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르쵸아 사상문화는 사회주의나라와 반제자주적인 나라에 대한 내부 분열과 사상정신적 와해책동의 수단, 군사적 침략의 길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동신문’ 6월 23일자는 “오늘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6월 24일자는 “적들이 속에 칼을 품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상을 가진다면 그것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며 대미관계가 진전돼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적’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으며 적들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

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1996년 이후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권력엘리트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돋보였다. 김영남은 거의 모든 외빈을 직접 접견하였다. 반면 최승철, 정운업 등 대남 관계 엘리트들은 모습을 감추었고, 남북 관계는 지속적으로 경색되었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장성택 당중앙위 행정부장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는 김정일 와병이후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사회주의’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후계자’에 내정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북한 박성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이 95세를 일기로 10월 28일 사망했고, 김룡연 인민군 차수도 사망(3.20)했다. 리용남이 무역상(3.18)으로, 로성실이 여맹위원장(3.28)으로,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가 외무성 부상(8.7)으로 임명되었다. 외무성에는 박의춘 외무상, 강석주 제1부상, 김창규(내부행정), 김계관(핵문제), 김영일(아시아), 궁석웅(유럽), 김형준(중동, 아프리카), 최수현(국제기구) 부상 등이 있다.

‘민주조선’ 2월 3일자에 의하면 김영일 총리 주재로 첫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광범기 내각 부총리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즉,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 4월 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가 개최되었다.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예산보고에서 “올해 국가 예산지출 계획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세우고 인민생활 향

상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102.5%로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끝내 개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정일 ‘와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내각은 7월 18일 ‘국경교두(국경다리)종합무역장 관리운영 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국경교두를 통해 대외경제 사업에서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국경교두 종합무역장 관리운영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조선’ 7월 24일자는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지도 관리하는 경제사령부”라고 주장하여 내각이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농민단체 전원회의가 7월 22일 개최되었고, 농업생산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자는 강조가 있었다.

2009년도 북한 정치는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일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일 와병’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 통제와 ‘일심단결’이 보다 강조될 것이고, 권력엘리트들은 생존차원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보다 많이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 와병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정치적 변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장성택대행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개최될 것이고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3~4세대들에 대한 충성심 고취도 지속될 것이고, ‘혁명선배에 대한 존경’도 여전히 강조될 것이다.

● 전현준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

2008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과제는 기초부문의 정상화를 통한 생산 실적의 회복과 대외무역의 질적·양적 확대 그리고 식량문제의 해결 및 시장화 확산에 따른 공식경제부문의 활성화 노력 제약을 해소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제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2008년을 시작한 북한경제는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4대 ‘선행부문’의 증산을 통한 기초체력 강화와 ‘인민생활제일주의’ 차원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증산을 강조하였다. 2008년 4월 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올해 국가예산 지출계획에서 4대 선행부문의 예산을 2007년 보다 49.8% 증액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강국’ 건설과 에너지문제 해소 및 대외무역 증대 등의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 제고’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8~2012년)의 과제 완수와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의 구축 및 정보산업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2008년 북한경제는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에너지 관련 물자의 지원 및 북한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그리고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 현상 등에 힘입어 생산실적이 전 분야에 걸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대 ‘선행부문’에 해당되는 전력 및 식량 생산 그리고 대외무역 부문에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의 경우는 수력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가 성과를 거둔데 더하여 6자회담의 틀에서 공급된 중유 및 발전설비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량 생산은 비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생육기간 동안의 좋은 기상환경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작황이 좋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농업성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한국농촌진흥청도 2008년 북한 식량 생산량을 43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도 상당한 실적 향상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금속공업성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2008.12.21)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8년 철광석 생산이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철강재 생산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생필품 공급 증대 정책과 일부 경공업공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더하여 외부로부터의 원료 공급의 증가에 힘입어 신발류 등을 중심으로 경공업부문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부문에서는 주요 시멘트공장의 생산 실적 증가를 토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평양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도로 등의 건설·보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외무역부문에서도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지난 10월 말 현재 2007년에 비해 31.6%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협력부문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러시아와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을 위한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진척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눈을 돌려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의 오라스콤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12.15)한데 이어 북한 무역은행과 합작한 오라은행 사무실을 평양에 개설(12.16)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유경호텔에 거액의 건설비를 제공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교역의 경우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 실적은 2008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말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도 생산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북한당국은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일탈 현상이 체제 안정에 위협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이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일반주민들의 시장활동 증가 현상이 공식경제부문의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둘째,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과의 결탁 등으로 시장활동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적 불만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셋째, 시장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되고 있어 소위,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09년 1월 3일부터 새 시장관리 규칙을 시행하기로 한다는 소문⁵과 함께 2009년 1월 1일부터는 양정사업소에서만 식량을 판매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⁶이 돌고 있어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는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09년도 북한경제는 매우 다양한 도전적인 요소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바, 경제실적을 개선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북한경제의 상황을 결정하게 될 주요 변수는 대내적으로는 첫째, 시장화 확산 현상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것인가? 둘째, 식량 부족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민들의 식량 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첫째,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계속될 것인가? 또한 경색이 계속될 경우 이에 따른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위축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인가? 둘째, 세계 금융공황의 발발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북한의 대외교역 및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북한의 체제안보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력을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48호, 2008.11.6.

6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43호, 2008.10.30.

먼저, 경제정책의 차원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지향적 제도개선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노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둘 경우 국제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한적 개방조치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08년 식량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회생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선행부문’의 정상화 및 현대화 작업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단기적으로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최첨단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의 시장화 현상의 확산에 대한 통제는 특히 2009년 초반에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식량의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고난의 행군시기’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북한당국의 시도는 외부에서 충분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확보하여 공급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황 여파가 북한경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외부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세계경제의 경기 침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북한 원자재 수입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자본의 북한에 대한 투자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교역 및 경험 규모의 축소까지 겹칠 경우 2009년 북한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임강택 ·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사회

2008년 북한 사회 부문의 특징은 주민 생활고의 지속, 사상교육 및 주민 통제 강화, 문화예술 부문의 대외교류 진전과 정보화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모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사상교육과 주민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 변화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가 사회 내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 요소의 확산, 외부로부터의 정보 및 자본주의 사상·문화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민 생활면에서는 지난 한해에도 식량난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고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2008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기아지수가 악화된 국가 중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식량난이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식량난의 원인을 세계적 식량위기와

연결시키면서 “인민 자신의 힘(민주조선, 7.24)”에 의거한 “총돌격전(노동신문, 7.27)”을 벌일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식량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콩국수, 라면 등 대용식량의 개발과 대량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금년 북한의 쌀 수확량은 140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만 톤 가량 증가했으나, 여전히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2009년도에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증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난 지속과 더불어 주민 생활에서 시장 관련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체제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주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가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사상교양, 선군혁명사상 교양, 혁명전통 계승 등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과 그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 사상교양의 주축으로 대두되었다. 사회주의의 변질은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주민 사상사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주민들의 대미의식 변화를 우려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극복할 것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일례로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세워 사상을 무너뜨리는 ‘유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유화전략은 당근과 채찍전술에 바탕을 둔 침략과 간섭전략(노동신문, 8.14)”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와 극복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고수를 위해서 새 세대의 혁명전통 계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

다. 북한의 새 세대를 “강성대국 건설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계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 이후에는 그에 대한 충심과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앞둔 9월 5일에 하달하였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10월 10일에 발표하였다. 체제 내부 결속과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이 담화문 발표 이후에 담화 학습과 담화 관철을 위한 실천운동을 독려하는 사상교육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경제난 지속과 대외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 동요와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검열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다. 2월 초에는 인신매매, 자식의 한국 도주, 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현금 수수, 손전화기를 통한 중국과의 연락, 마약 장사 및 밀수, 무직, 무단 숙박 등 7가지 비사회주의 검열 요강이 국경연선지역에 전달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특히 전화통화를 통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평양시를 제외한 전국의 가정에서 시외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시외전화시 체신소를 통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손전화기 사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시행되었다. 한국영상물 CD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남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사회주의 검열 그루뵀’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조치가 취해졌다. 시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시장 운영시간 제한, 판매 품목 제한, 장사 연령 제한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최근 들어서는 장사 연령 제한은 물론이고

주요 도시에서 9월 중순경부터 음식 장사를 금지⁷하는 등 장사 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고, 쌀 가격을 비롯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매점매석을 한 일부 무역업자들을 비공개처형했다는 소식⁸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장 개장 횟수를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확대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제와 법규칙을 강화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매월 하루만 시장을 열도록 하겠다는 지시문⁹이 하달되었다. 그 시범조치로 평양시는 금년 10월부터 매월 하루씩만 시장을 열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로 장사 연령과 시장 운영 시간을 제한하던 작년의 조치에서 한층 강화된 통제 방식으로, 향후 경제 및 식량 상황에 따라 시장의 대폭 축소 시도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장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단속원과 장사를 하는 여성들 간에 마찰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내부적인 사상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서구사회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을 모색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금년 2월에는 뉴욕필하모닉교향악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으며, 이 공연 실행을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방영하고 해외에도 생중계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내년 3월 북

7 『오늘의 북한소식』, 제223호, 2000.10.2.

8 『오늘의 북한소식』, 제198호, 2008.8.28.

9 『오늘의 북한소식』, 제248호, 2008.11.6.

한 국립교향악단의 뉴욕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아리랑 공연과 9월에 개최된 제11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등을 통해 북한 문화예술의 해외 홍보와 서구사회와의 문화예술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외교 업적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금년 공동시설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을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업의 하나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 부문에서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초등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9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종래보다 2년 앞당겨 소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80여개 학과를 30여개로 통폐합하고, 정보공학, 나노공학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화상강의,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평양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각 도 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주민들의 식량 문제, 시장 요소의 증가,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 증대,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서구문화 유입에 따른 사상적 이완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대외적 변화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는 정국이 전개될 것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가 개선

되고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다면, 대내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식량 공급 상황이 나아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장활동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경우 시장의 대폭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교육 부문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효율적 인재 양성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조정아 ·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2008년도 들어서도 군사부문에 있어서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왕성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 관련 현지도 소식이다. 올해의 경우 김정일 군사부문 활동 관련 보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총 93회 공개 활동 보도 중에서 50회가 군사 분야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38회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군사력 증강부문에 있어서도 북한은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강화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핵 실험장 시설을 유지하면서 미사일 발사장 시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수전 부대 증강 등 재래식 전력향상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전력강화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북한은 연말연초에 연례적으로 단행해 왔던 동계훈련(2007년 말부터 2008년 3월)을 예년대비 50%나 강화하여 진행하였다. 지난 1월 동계훈련기간 중 전투기의 일일 출격횟수를 13년 만에 최고수준으로까

지 늘렸다. 북한 공군의 경우 그동안 연료부족으로 비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전방기지로의 전투기 전개훈련도 2005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에만 동 전개훈련을 3차례나 실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미사일 부대 참가도 대대급 규모로 미사일 조작과 지휘소연습(CPX) 등이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부대들을 참여시켜 국경지역에서 강도 높은 진지 및 수색을 실시하는 훈련을 벌인 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비교적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북한과 중국 군사 대표단의 상호 방문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4월 북한의 공군대표단(단장: 이병철 공군사령관)이 중국을 방문(4.22~26)하여 북한 공군사령관(이병철)과 중국 국방부장(양광렬) 간의 회견이 있었으며, 10월에는 중국 공군정치부 문공단(단장: 손곤 공군정치부 부주임) 방문공연(「홍매찬가」공연: 10.26~27, 동평양대극장)과 북한군 대표단(단장: 김춘삼 상장)의 방중(10.28~11.1)활동, 12월 북한군 대외사업일꾼대표단(단장: 연경철 대좌) 중국 방문 (12.12) 등이 이어졌다. 중국이외 국가들과의 군사교류활동 또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단장: 주상성 인민보안상)의 라오스 방문(6.2), 북한군 대외사업일꾼대표단(단장: 안영기 소장)의 몽골 방문(7.15), 북한 공군대표단 (단장: 이병철 상장)의 쿠바 방문(11. 15~11.25) 등이 있었으며, 우간다 당 및 정부군사대표단 방북(4.28.~30), 브룬디 군사대표단 방북(5.28), 베트남 군사대표단(레빈중 국방부 총정치국장) 방북(9.23~27), 시리아 군 대표단 방북(10.2), 베트남公安성 대표단(단장: 「레홍아잉」公安상) 방북 및 「호상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10.6~9), 몽골 국방성 대표단 방북(11.17~21) 등이 있었다.

대남차원에 있어서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위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활동이 이어져 온 것이 특징이다.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3차례 발사(3.28)하였고,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경고하였다. 남북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4.3)을 통해 ‘긴장 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오히려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으며 북한 해군사령부 보도로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으로 위협하였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전쟁위협 발언이 북한 조선중앙통신 군사 논평원 글(5.8)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이 또 발사(5.30)되었다. 6월 22일에는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로 북측 군부가 직접 나서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 조성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동사업에 대한 군사적 위협시위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개월도 채 못 되어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7.11)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이어 여기에서도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로 북한군부가 직접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 발표를 단행하였다.

북한군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 조장은 9월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23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7일 북한의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이 발사된 지 이틀 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는 주장을 담은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10.9)가 나왔다. 10월 2일과 10월 28일에는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가 우리 민간인의 대북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이라는 강한 군사적 경고를 하고 나왔다.

북한 군부가 마치 개성공단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1월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이 직접 개성공단 현황 점검을 실시하면서 개성공단의 존폐위기 관련 엄포를 하고 나섰다.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을 담은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11.12)이 나오고 이어서 11월 24일에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직접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입장을 통보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시위는 대내적으로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명분하에 주민동원을 통한 주민통제 및 결속 강화로 체제 안정화를 기하는 데 활용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당국은 김정일 건강 이상 소문 확산에 따른 정치·사회적 일탈현상 즉, 지도부 내 권력투쟁 가능성 및 주민동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미·일에 대해서 ‘3각 군사동맹구축’을 통해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¹⁰고 한다든가, 남한에 대해서는 남측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괴뢰당국’이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외부적 침략위협성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해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비한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를 견

¹⁰ 인민군 창건 76돌 『중앙보고대회』

지할 것을 독려해 오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시위 또는 위협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 선언 전면 이행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크다. 군사적 긴장조성(서해해상 미사일 시험발사 등)→ 남한사회 불안심리 조성→ 대 이명박 정부 부정적 여론 확산→ 정책변화 유도 추구하고 같이 일종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한 정책변화 유도 술책인 셈이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의 비군사적 사업의 중단 또는 제한활동조차도 북한 군부 주도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적 위협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등 전 방위적인 위협전술을 구사하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도에도 북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활발한 군사 관련 현지지도 보도로 군사최고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공고화하고 군사우선주의에 입각한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과 재래식 무기 전력향상 노력을 지속하는 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대내외적인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전투동원 태세 견지를 독려하는 등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이라든가 남한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선군사력 건설 및 내부 동원체제 유지를 정당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6자회담 핵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산발적인 군사적 모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사일 시험발사 감행 및 핵불능화 조치를 해제하는 핵활동 재개 등 일련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취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를 통하여 내부체제 단속

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 유도로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중국 및 제 3세계 국가들과의 군사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다지는 외교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주요 대외관계

가. 북미관계

2008년은 북·미관계는 북핵문제의 진전에 대한 기대로 시작되었다. 2007년 10월 3일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3월 26일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은 북·미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2단계 비핵화를 결론 맺는데 실패하였다.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북한은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맞추어 부시 대통령은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중단하고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미의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45일이 경과한 8월 11일까지 북한과 미국은 북핵신고에 대한 검증체계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였다. 북한은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불능화의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9월 1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얼마전부터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8월 26일 성명은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이며 검증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핵무기 폐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검증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남북한 상호검증을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9월 22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의 제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일주일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하였다. 긴박한 상황에서 10월 1일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일차적으로 북한이 신고한 영변 핵시설에 국한해서 검증을 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핵무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증하기로 하는 분리 검증안을 북한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11월 12일 담화를 통해 ‘현장 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만 검증에 포함되며 쟁점인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12월 8~11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지리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미비난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한은 3월의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11월의 상륙 훈련 등과 관련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격렬히 반발하였으며, 한·일 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대해 핵선제공격론이라고 비난하였다. 노동신문 논평(7.28)을 통해 평화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09년 북·미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며 미국의 포용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 공화당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상회담은 물론 북핵문제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힐러리 국무장관과 같은 고위급의 방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만으로 북·미관계의 장밋빛 전망을 속단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대북정책에서 오바마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접근방법에 관한 것이며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차이가 없다. 오바마가 국내정치적으로 마이너리티 대통령이라는 한계로 인해 ‘애국주의’에 벗어나는 과감한 외교행보를 보이기 어렵다는 것도 오히려 북핵 문제에 대하여 보다 원칙적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을 보탠다.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은 오히려 북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캠페인 기간중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4년 내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핵무기가 생산되는 것을 금지하여 핵무기의 확산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NPT체제를 강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적극적인 포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대북 포용정책은 시료채취가 포함된 검증 프로토콜에 북한이 합의하고 이에 따라 핵사찰에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일차적 관문이 될 것이다. 이후 2단계 검증대상인 핵무기, 핵확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북·미간에 순조로운 합

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 최진욱 · 북한연구실장

나. 북중관계

(1) 정치, 안보 관계

2006년 10월 초에 북핵 실험은 후진타오 정부가 추진하여왔던 대북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노력을 수포로 돌렸으며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여온 중국의 정책이 제고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7년 초부터 대북 정치, 외교, 안보 협력을 확대코자 하였다. 2008년 중국이 북한에 구사하여 온 정책 기조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확대하는(繼承傳統、面向未來、睦鄰友好、加強合作)”에 있었다. 상기 인식하에 중국은 북한과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양국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번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북한에 표방하였다.

중국의 대북 관계 진전 의도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토록 한 데서 나타났다(1.29~2.2). 친서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북경올림픽대회 개막식에 초대하였다. 왕자루이 중국 당대외연락부장은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북한의 남북 경협 활동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왕자루이 당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북중우의는 양국선배 지도자가 남긴

귀중한 재산으로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2007년 국제정세가 복잡 다변하였음에도 북중관계 발전은 더욱 좋았으며 지속적인 북중 우호협력관계 발전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1.30).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개선은 북한이 당면한 최우선 임무이며 중국 측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좋은 점을 배우기를 바란다고도 표명하였다(1.30). 이에 대해 왕자루이 당대외연락부장은 최근 들어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양국관계 고도의 중시와 배려 속에서 양국이 부단히 발전하였으며 중국 당과 정부는 고도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북 관계를 파악하여 북한과 계속해서 선린친선협력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30). 1월부터 중국의 대북 관계 증진 촉구에 응답하듯 김정일 위원장은 주북한 중국대사 류샤오밍(劉曉明)의 초청형식으로 북한군, 당, 정 관련 고위 인사들을 대동하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다(3.1).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대사관 방문은 2007년에 이어 1년 만에 이뤄진 의례적인 일이었다. 류 대사는 중국정부의 북경올림픽 준비상황과 올림픽 봉화가 압록강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음을 김정일 위원장에 알렸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30주년,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주은래 전 중국 외교부장의 생신 110주년과 방북 50주년 등을 축하하였다(3.1). 중국의 올림픽 송화 축하를 위해 북한의 40만 평양시민이 참여하였으며 류 중국대사는 이에 감사하였다(4.28). 서울에서 중국 올림픽 송화에 중국학생과 한국시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북중 관계 증진은 북한 외상 박의춘이 4월 중순에 방중하여(4.26~4.29)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서 표

출되었다. 북중 외무장관 북경회담에서(4.28)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협상 제2단계 행동이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추진되는 것이 유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의견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여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박익춘 북한 외상은 한반도비핵화실현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며 유관 국가들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각국이 맡은 임무를 착실히 해내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박 외상은 중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향후 중국 측과 상호 좋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서 견지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외상의 중국방문에 이어 북한은 고위급 군인사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북한 공군사령관 이병철은 방중하여 중국 국방장관 梁光烈(양광리에)과 면담하였다(4.22). 양광리에 중국 국방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군인사 교류의 체제화, 제도화, 규범화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보호에 공헌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병철 북한 공군사령관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피력하였다.

중국 사천성 汶川縣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명의로 후진타오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5.13). 중국 사천성 지진을 애도하기 위해 북한은 평양 상공에 경보를 울려 중국인민을 애도하는 등 중북 우호를 과시하였다(5.19).

2008년도 중북 관계의 최고 분수령은 習進平(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이다. 2005년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방북이후 최고위층의 방북인 셈이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朱之鑫(주지흠), 외교부 부부장, 중련부 부부장, 상무부 부부장, 중앙

정책실 부주임 등을 대동하여 방북하였다(6.17). 시진핑 부주석은 양형섭 부위원장과 회담에서 중·북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특히 고위층간의 왕래와 교류 확대를 통해 정치 관련 의견 소통을 주문하였다(6.17). 이어 시진핑 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였다(6.18). 면담에서 시진핑은 북한 건국 60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북한인민이 국가건설사업에서 새롭고 거대한 성취를 이루기를 축원하였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북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과 면담하였다(8.7).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은 중북 건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세기에 맞게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남은 북중 우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하여 북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여(8.8) 이명박 대통령과 짧은 조우만 있었을 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해 남북 관계가 여전히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미북 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화답하듯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10.11). 북한은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였던 조치를 해소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입장이 발표된 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6자회담에 관련국들이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취한 북핵 협상 진전 노력에 대해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한다”고 평가하였다(10.16). 이어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도 논평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면서 “핵 검증 체계와 관련된 문서(검증 이행계획서) 채택 과정에서도 중국은 각 당사국과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1.14). 중국은 북한의 검증의정서가 6자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불가 입장과는 달리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 불능의 대가”라고 밝혀 중유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였다(12.16).

주북 중국대사 유효명은 대사관에서 신년행사로 북한 군인사들과 환담하였다. 참석한 북한 군인사들은 인민무력부부부장 박재경 대장, 해군부사령, 공군부사령등이다(12.19). 박재경 대장은 중국의 우주선 발사를 축하하면서 중북 양국의 군관계는 고위급 및 각 부문에서 교류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군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만족한다고 언급하였다(12.19).

2009년에 중북 양국은 우선 2009년이 “중북친선의 해(中朝友好年)”로 지정되었음과 함께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을 위해 양국의 친선우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 접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대북 포용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특히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더욱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대북 직접 대화 제안을 환영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여 미국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검증을 회피한다면 대북 경제지원이나 정상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북한이 핵비확산 약속과 핵검증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핵비확산 약속과 핵검증 수용 보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 회담 진전에 신경을 더 쓸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관계

중·북 경제관계는 교역, 투자,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어 왔다. 2008년도 중·북 교역은 2007년에 비해 약 16.1%가 증가하여 19.7억 달러에 달하여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북 투자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 종목이 85개 부문 2.6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북 투자는 중국이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한 데서 나타났다. 전구 등 조명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중조합작기업인 평양아명조명합영사와(2.27) 담배를 생산하는 중조합영연초공사가 설립되었다(4.23). 평양아명조명합영사는 상해 소재 기업과 공동 설립한 것이며, 평양백산연초합영회사는 길림성 소재 중국회사와 북한 소재 조선연초수출입상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중북 양국은 황해북도 용진군에 있는 용진철광을 5억 달러 규모로 공동 개발기로 하였다(6.15).

중국외교부는 북한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능력이 있는 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1.14). 중국이 대북 경험 확대를 지속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천연 자원 확보를 위한 데 있었다.

중국은 북한과 2008년부터 2년간 기상과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07.11.27).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기상관련 자재를 지원하였다(9.4). 북한의 무역성, 문화성은 공동주관으로 평양인민문화궁에서 “중조 경제및문화합작협정” 체결 5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11.20). 내각부총리 노두철, 무역성 부상 이명산, 문화성 副相 한철, 외무성 副相 김형준, 대외문위부위원장겸조중우호협회부위원장 전영진 등이 참석하였다.

2009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조금 증대되거나 2008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2008년 말에 나진 선봉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단한 것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북한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중국경제가 당초 수립하였던 9% 성장률에서 6% 성장률로 조정되어 경제발전이 저하됨에 따라 대북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2008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의 대북 지원이 아주 민감한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춘흠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일본의 대북정책은 후쿠다 정권의 등장과 함께 ‘압박’에 비중을 둔 대북 강경정책에서 ‘대화와 협상’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북·일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2007년 10월 14일의 ‘선양(瀋陽) 북·일 비공식 회의’에서 ‘연내 수차

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화를 가속화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2008년 6월에 접어들어서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6월 11~12일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9개월만에 개최되었다. 베이징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는 납치문제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즉, 베이징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바꾸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북한은 항공기 ‘요도호’의 납치범 및 가족을 일본정부에 인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은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인도적 물자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해제, 전세기의 북한 입국 금지 해제, 북·일간 인적 왕래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반면, 일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중유 제공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그리고 베이징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직후,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008년 6월 13일,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는 북한의 테러 지원 국가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꾸어 ‘북한의 테러 지원 국가 지정 해제를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의 일부 해제와 관련, 일본의 대북정책이 2008년 6월의 베이징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를 계기로 궤도 수정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어, 동년 8월 11~12일에 선양(瀋陽)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2008년 6월의 베이징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구체적 사항 협의를 위해 2개월 후인 8월 11~

12일에 선양(瀋陽)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동년 8월 11일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국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었으므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즉,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에서 해제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 2008년 6월의 베이징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합의를 기반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므로 국내외의 긍정적 기대와 함께 북한의 태도와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다.

그런데, 2008년 8·1 내각 개조에서 기용된 나카야마 요코(中山恭子) 납치담당 장관이 일본측 교섭 대표단에게 신중한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교섭 첫날인 8월 11일의 북·일 교섭은 진통 속에 전개되었다. 장시간동안 회담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북·일 회담은 교섭을 결렬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담의 틀을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마침내, 동년 8월 12일에 북일 양측은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즉, 선양(瀋陽)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자 피해자의 전면적 재조사와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종료 일정, 일본측에 조사내용의 수시 보고, 조사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인적왕래·전세기 왕래 규제 등에 대한 해제조치의 실시, 선박의 입항 금지 해제의 협의, 요도호 납치 사건 관계자 귀국문제의 계속 협의 등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1일 후쿠다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납치문제 재조사는 연기되게 되었다.

2008년 8월 30일자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북한이 일본인 재조사와 관련,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개시일을 9월 초순경에 일본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지만, 후쿠다 총리가 사임을 전격 발

표한 직후에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연기한다고 일본측에 통보하였다.

요컨대, 후쿠다 총리의 전격 사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등으로 북·일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후쿠다 내각을 계승하여 아소 내각이 등장했는데, 북·일관계는 소강상태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아소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08년 9월 25일에 유엔 총회연설을 통하여 “북한 핵 불능화 과정에 진전이 없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본은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아소 정권이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 역점을 두고 대북전략을 전개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소 정권은 2008년 10월 10일의 각료회의에서 10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제재’의 시한을 6개월 재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소 총리는 동년 10월 15일 납치문제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각료회의를 열어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아소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아소 정권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아소정권의 대북 압박조치, 국민적 지지율이 낮은 아소정권의 대북 정책 추진력 취약 등으로 북·일관계는 또다시 냉각되었고,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배정호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관계

북·러 양국은 북한정권 수립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친선 선린 관계를 증진하였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이후에는 북한과 핵협상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사업이 마침내 착수되었다.

2008년 초, 북·러 양국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주북 러시아 대사관과의 신년 친선모임(1.18), 주북 러시아대사관 연회(2.20),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연회(2.22) 등을 통해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러시아 총리로 임명된 푸틴 전 대통령에게 축전(5.9)을 보내고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강화, 발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17.5km)을 맞대고 있는 북·러 양국은 국경 질서에 관한 새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국경선 재확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신임 러시아 대통령은 광복 63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교환(8.15)하고 전통적인 친선 선린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수립 60주년(9.9)을 축하하고 북·러간 전통적인 선린관계가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 안정, 안보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장차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등과 관련, 러시아 측은 한국 언론이나 외신만 인용 보도할 뿐 자체적인 취재보도를 일체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상황의 불안정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러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와 사진전시회, 영화감상

회 등 다양한 축하 행사와 고위급 방문으로 친선관계의 증진을 과시하였다. 주러 북한대사관에서 러시아의 외무부, 연방평의회, 국방부, 경제발전부, 「러·북 정부간 경제협조위원회」, 모스크바시 정부, 모스크바시 내무총국, 「러·북 친선문화협조협회」 등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을 개최(10.13)하였다.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10.15)을 갖고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을 만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11.19). 그리고 최태복 의장은 미로노프 의장의 북한 방문과 양국 의회 대표단의 정기적 상호교류를 제안했고, 미로노프 의장은 북한 측의 초청에 응하면서 자신의 북한 방문 기간에 교류협정을 맺자고 밝혔다.

안보·군사 면에서 6자회담은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싱가포르 합의(4.8)에도 불구하고 농축우라늄과 핵기술 이전에 대한 북한의 정보제공 거부로 교착되었다.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와 관련 양국 공동성명(5.23)에서 “양측은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며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찾기 위한 노선을 설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6.26), 북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과정 착수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종식 선언,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발 등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발전을 매우 만족스럽

게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6자회담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외무부 성명(6.28)을 통해 피력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흑가이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성명(7.9)을 통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움직임에 환영했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속한 불능화의 중요성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강조하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8.26)하고 원상복구를 시도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결정에 실망했고 우려한다는 성명(8.27)을 발표하고 “우리는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된 약속을 지키고,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지속하며, 금년 10월말까지 이 과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10.11)하고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재개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만족을 표시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10.14)하였다. 북·러 수교 60주년 기념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박 의춘 외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동(10.15)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전개될 북핵 협상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10.8~11)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브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불능화가 진행되는 한 대북 중유지원도 계속한다는 입장을 표명(12.13)하였다.

경제면에서 북·러 양국이 경제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나진-하산 간 철도 개선과 나진항 개보수 공사에 합의하고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 김용삼 북한

철도상은 양국 철도협력에 관한 협정과 합영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서에 정식 서명(4.24)하였다. 주요 내용은 두만강-나진 철도 재건,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인프라 구축, 하산-나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설립 등이다. 이 합의에 따라서 북·러 양국은 나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합영회사를 설립(7.17)하였고, 러시아는 나진-두만강 철도 현대화의 대가로 철도 임대권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선 착공식이 양국 고위인사들의 참석 하에 나선시 ‘조·러 친선각’ 앞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서 밀가루 2,860t이 북한으로 운송(6.11부터)되었으며 WFP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8.25)에 의하면, 러시아의 『아브토바즈사』가 북한에 600대의 ‘라다-2170’과 250대의 ‘라다-4’ 승용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의 투자회사는 북한 진출을 위해 이 승용차를 무상 제공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TU-204 신형 여객기 1대를 구입(2007.12)한 데 이어 2008년 1대를 추가 도입했고, 향후 노후한 여객기들을 러시아산 신형 비행기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10.22)되었다.

2009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관계 진전이 예상되므로 러시아는 정부와 의회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대북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 양자회담 보다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심화와 국제원유가 폭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2009년 경

제성장률 3%대 전망,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 등으로 북·러 경제관계는
담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인곤 · 기획조정실장

3. 대남동향 : 체제유지를 위한 通美封南, 通民封官

2008년 북한은 대내 체제결속을 위해 강경한 대남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남북관계개선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한 데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대남 비방을 다시 시작하였다. 동시에 금강산 및 개성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의 제한적 폐쇄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대남 압박조치를 진행하였다.

200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2007년을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해로 정의하고, 2008년에 남북고위급 협상 진행 등 다방면의 남북협력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2007년에 전투적 구호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라는 3대과업의 실천을 주장하였던 것과 달리, 2008년에는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번영·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방면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했다. 물론 북한은 ‘민족공조’,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 거부, ‘반전평화투쟁’ 촉구,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등과 같은 주장들은 지속하였다.

2008년 3월까지 북한은 침묵 속에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2007년 제17대 대선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격렬히 비판했으나,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남한의 정권교체에 대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경협사업이 승계되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뒤에 발표된 2008년 1월 1일 신년사(“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통해서 “우리는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 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2.25)에 고위급 축하사절 파견을 모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을 분수령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우호적 기대에서 적대적 비판으로 변했다. 2008년 3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2~7)이 열리게 되자, 북한은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부의 후예들인 보수 집권세력’이라고 조평통 대변인 담화(3.6)를 통해 비난하고, 서해상에서 3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를 전원 추방(3.27)하고, 서해상에서 미사일 3발을 발사(3.28)하였으며, 마침내는 노동신문 논평(4.1)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격렬히 비난하며, “남조선당국이 반복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며 『비핵·개방·3000』 구상의 대북정책 수용을 전면 거부하였다. 나아가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5.8)을 통해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 발발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이어 서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5.30)하였다. 또한 남북군사회담 대변인 명의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위기를 천명(6.22)한 뒤, 조평통 대변인 담화(7.8)를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7.11)과

관련하여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였으며, 노동신문(8.24)은 이명박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2008년 10월부터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대남 위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10.2; 10.27)을 통해 전단(빠라)살포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단이 계속 살포될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개성관광에 대한 엄중한 후과와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남측 인원 통행 제한 등의 모든 남북관계를 중단하는 등 “이미 경고한대로 우리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북한체제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10.7)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원 글(10.16)을 통해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을 반민족적정책으로 비판하고, 남북관계가 대결과 무모단계를 넘어 위협계선에 이르렀고, 단절과 악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격동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11.21)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운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단행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가 남북관계의 “전면차단 중대기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1차적 조치 단행”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위원장 명의의 담화¹¹⁾를 통해 ‘6·15공동선언 및

¹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0.4 선언의 성실 이행'을 강조하면서, 절박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초석을 깔아놓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진행되어온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공조에는 3차원이 있다.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리 민족공조'와 안보난 해소를 위한 '반미 민족공조' 그리고 북한중심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 민족공조'가 그것이다. 북한은 남북회담도 이런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결구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고서는 경제난과 대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대결구도를 지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고난과 고립 속에서 북한은 점진적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적어도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남북대결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남북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 대통령에 오바마가 취임해서 한·미간에 정책적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될 경우, 북한은 전통적 통미 봉남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는 한편, 남한 사회의 분열을 이끌어 내기 위해 통민 봉관전략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또한 목표와 추진의도에서 지난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당보 노동신문과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준 담화(2008년 9월 5일)

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우선사회인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북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당국 관계에서 우세한 거래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예컨대 핵 폐기 협상과정을 통해 대미 관계 수립을 이뤄내고자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협상과정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위의 협상지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의제와 속도조절을 통해 당국간 대화를 북한의 의도대로 적절히 이끌어나가고자 할 것이며, 한국정부를 우회하여 한국 내 야당 정치세력과 연대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심화시켜 한국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 협상을 좌절시켜 북한체제를 방어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을 최소화하고 내부정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이다. 군사부문에 있어서는, 때때로 군사적 긴장조성에 대한 협박 또는 실제적 작전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주려할 수도 있다.

- 허문영 ·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



1. 남북대화

가. 남북 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였다.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대북정책의 목표가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하며, 그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여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2008년 한 해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1988년 ‘7·7 선언’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통합을 이끈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논리에 기반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중시한 접근법이었다. 즉, 남북한 교류협력의 양적 확대는 북한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대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세계사적 추세와는 동떨어졌고 개혁·개방의 의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은 대북 포용정책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21세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에 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되

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목표 지향적’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의 보편적 가치의 존중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위해 남북관계의 규범과 룰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는 단순한 교류협력의 증대 이상의 남북관계의 추진 목표를 뚜렷이 하는 한편, 남북협력의 규범과 규칙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상의 전환은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압축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협력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이제 과거의 패턴과 관행을 뛰어넘어야 한다. 남북경협 문제를 과거 경협의 연장론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족 특수성의 논리보다는 경제 원리에 입각한 남북 간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은 실천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의 목표와 논리를 바꾸는데서 비롯된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망설이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및 개방 결단을 통해 국민소득 3천 달러를 달성하는 발전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촉구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낙후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북한이 본격적인 발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을 이루어가자는 데에 기본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이 구상은 지금까지 단순히 교류협력을 중시해왔던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지양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은 ‘목표제시적’ 접근에서 비롯된다. 즉, ‘북한 주민 GNI 3,000 달

리'라는 목표를 제시한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전략이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하였고, 정부 당국자들을 비난함으로써 남북 간 당국대화는 단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초가 바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2009년 북한이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조 민 · 통일정책연구실장

나. 남북대화 전망

북한은 남북대화를 비롯한 대남전략을 대미전략의 하위체계로 접근해왔다. 즉, '선 대미협상, 후 대남관계'의 구도 속에서 파악된다. 북한은 2008년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내외 정세를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의 신년공동사설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 2008년을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바라보았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회복의 포부는 북핵 협상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2008년 핵협상은 전반기에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 대북협상정책으로 북한은 보다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검증 문제가 돌출됨으로써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 해

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이외에 충분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이는 외부의 경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북미관계가 풀리면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배제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북한은 2008년 전반기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고, 후반기에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의 승리로 2009년도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라는 대남 강경 카드를 내밀었다. 북한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2009년 북한이 더 이상 강경 카드를 내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적절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절박한 한계 상황을 반영한다.

2009년 북한은 남북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에너지난 특히, 전력난은 심각하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성대국 문턱에도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경제난을 극복하기도 힘들다. 북미협상을 통한 대미 정치적·전략적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쉽지 않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남한을 북미관계의 종속 변수로 여겨왔다. 그러나 2008년 한반도 정세의 역학구조는 북한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그러한 변화된 구조 속에서 남북관계는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와 달라졌는데, 이는

지난 2008년 제6차 6자회담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WG)의 의장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즉, 대북 중유지원의 에너지협력 과정에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자’로서의 의지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향후 북미협상과 6자회담 틀 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위상 확인에 상당히 당혹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2009년에는 경수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북한은 절박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미협상에서 경수로 제공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검증 수용 요구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가운데 경수로 제공을 반드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 문제가 북미협상에서 타결된다면 경수로 건설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으로 타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셋째,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다. 2009년 남북협력기금은 1조5천85억6천여 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08년의 남북협력기금 예산보다 약 8.6% 증액된 것이다.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매년 책정되는 엄청난 액수의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보따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경제 희생의 종자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당국자는 대내외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국 이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도 없으며, 북미협상과 6자회담 틀 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높아져 가는 현실을 북한은 더 이상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변화된 현실 속에서 2009년 전반기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으며,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 조 민 · 통일정책연구실장

다. 경제분야회담

2008년도 남한과 북한간 경제분야 회담은 10.4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1월 중에 몇 차례 개최되었다. 첫째,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에서 2008년 1월 22~23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이 “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회담을 미루자”고 하여 회담이 연기된 바 있었다. 동 회담에는 남측에서 원인희 위원장(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과 3명의 위원이, 북측에서 박정성 위원장(철도성 국장)과 5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회담 결과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는 내용과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문제 및 문산-봉동간 화물 열차 운행문제와 베이징올림픽 응원단 열차운행 관련 긴급보수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한편,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과 관련, 2008년 2월 1일부터는 화물열차는 매일 운행하되,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판문역 출입절차 간소화, 화물종류 확대 등 화물운송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둘째, 남한과 북한은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과 관련해서 제2차 실무접촉을 2008년 2월 4일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양측은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응원단 규모, 이용열차 등을 협의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우선적으로,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기 150명씩으로 하고, 응원단은 개·폐막식에 참가하여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고,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응원단 이용열차 및 그 편성 등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하며, 제3차 실무접촉은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남한과 북한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2008년 2월 5일 개최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논의되어 온 금강산 관리

위원회를 빠른시일안에 설치하기로 하고,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합의하였다.

넷째, 남한과 북한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12~13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개보수 공사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이후 경제분야 남북회담은 북한의 대남한 당국간 대화 거부사태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다.

2009년도 경제분야 남북회담의 개최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남한의 당국간 대화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경우에는 경제분야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남한과 북한은 우선적으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분야 남북회담은 기본적인 남북관계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규륜 · 남북협력연구실장

라. 군사분야회담

2008년도 들어 처음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월에 개최되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차원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

(07.11)에 이어 12월에는 군사실무회담과 장성급회담이 각각 1차례씩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남북 양측은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행과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 통신, 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이러한 작년 남북군사회담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개선되었으며 남북 양측이 이를 검토하고 추후 관련 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과 열차 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남북 철도협력분과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전해졌다.

이후 남북한 간 군사회담은 완전 중단되어 오다가 북한의 제의로 10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재개되었다. 동 군사회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특히 남측 민간인들의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다. 북한 당국이 전하는 보도(10.2, 중·평방 및 중앙TV)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 그들은 “빠라살포행위의 엄중성에 대해 폭로”하고 이는 “침예하고 긴장한 현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로 되며, 새로운 군사적 불씨로 될 수 있다는 데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동시에 빠라살포 행위가 계속 될 경우 첫째, “개성공업지구의 모든 남북협력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며”, 둘째,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들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될 것이며”, 셋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들이 더 이상 현지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고 한다.

반면 우리 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04.6.4)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북측이 이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 첫째,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및 비방 중단 촉구
- 둘째, 남북간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 전면 재개 주장
- 셋째,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한 사건 관련 북측의 유감 표명 및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 조속 마련 요구
- 넷째, 개성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의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 불편과 애로 관련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 해결 촉구

이에 대해 북한은 금강산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번 남북군사회담을 단지 뼈라살포 관련 종래의 재발방지 촉구 및 일반적 경고 수준에서 벗어나, 개성·금강산 등 민간 교류를 연계시켜 강도 높게 경고하는 대남 군사적 위협기회로 활용하였다.

이어 10월 27일 남북군사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는 27일 오전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군사실무책임자 접촉 수준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MDL 선상에서 대화를 나눴고 상호 교환된 각자의 입장을 돌아가 검토하기로 하고 20분 만에 접촉을 끝냈다. 북한은 여기에서도 남측의 전단(뼈라) 살포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통신망용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

려졌다. 10월 2일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측은 전단 살포문제와 개성공단사업 및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 제한 그리고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남측 인원의 체류 연계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여전히 남측에 대한 위협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동시에 북한은 이 회담에서 군 통신망 정상화 관련,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군 통신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군 통신 자재와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실리 챙기기를 잊지 않았다.

2009년도에도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같은 본격적인 군사회담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경제적 이익 또는 군사적 위협 기회 활용 등 특수한 목적 관철 차원의 군사실무회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인 바, 이의 재개 또는 정상화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 예상된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북한은 3월 말부터 대남 강경조치와 비난을 지속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부정하고 비핵·개방·3000 정책 등 남북 대결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우리측 인원이 철수(3.27)하였다. 북한은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거부(3.29)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3월까지 남북 당국간 협의가 수차례 진행되었을 뿐이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9~30), 『금강산 관리위원회』 관련 제2차 실무접촉(2.5)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 실무접촉(2.5),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12~13)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개성공단 「자동차 관리규정 시행세칙」 관련 남북 실무협의를 두 차례(3.6, 3.20)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10월부터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대남 위협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실무회담(10.2)에서 ‘전단’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대북전단의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개성관광에 대한 엄중한 후과, MDL을 통한 남측 인원 통행 제한, 개성·금강산 체류 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MDL 육로통행 제한을 통보(11.12)하였고,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개성공단 남측 체류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조치의 시행을 통보(11.24)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의 절반이 철수하였다.

<표> 유형별 남북한 거래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거래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1~10)
반입	남북교역	258	320	441	645	532
	경제협력	0	20	77	120	250
	비상업적 거래	0	0	1	0	0
	소 계	258	340	520	765	782
반출	교역	89	100	116	145	159
	경제협력	89	250	294	520	509
	비상업적 거래	261	366	421	367	95
	소 계	439	715	830	1,032	773
합 계		697	1,055	1,350	1,797	1,555

자료: 통일부

이런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2008년 1~10월중 남북한 거래 총액은 15억 5,52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4억 3,958만 달러 대비 8% 증가하였다. 이 중 반입은 7억 8,228만 달러로 전년의 6억 1,113만 달러보다 28% 증가하였으나, 반출은 7억 7,291만 달러로 전년 8억 2,845만 달러 대비 7% 감소하였다. 반출의 감소는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상업적 거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8년 1~10월중 유형별 남북한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반입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상업적 거래만 이루어졌다. 상업적 거래에서 남북교역은 5억 3,172만 달러(일반교역 3억 1,612만 달러, 위탁가공교역 2억 1,460만 달러), 경제협력사업

을 위한 거래는 2억 5,029만 달러(이중 개성공단 관련 2억 3,445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교역을 통해 1억 5,881만 달러(일반교역 3,000만 달러, 위탁가공교역 1억 2,881만 달러), 경제협력사업용으로 5억 862만 달러(이중 개성공단 관련 4억 4,350만 달러), 비상업적 거래로 9,500만 달러가 반출되었다.

2008년 남북한 거래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대북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협력사업과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남북한 실질교역 수지(남북교역 수지)는 3억 7,291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경제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은 거의 대부분 개성공단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1~10월까지 남북한 거래총액에서 개성공단사업(6억 7,795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나타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서 개성공단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2008년(1~10월)에 경제협력사업(자)으로 55건을 승인하였다. 지난 해 176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대덕전자, 한미스위스광학을 비롯한 47건은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사업을 위해 승인을 받았고, (주)아천, 바두바투, 아천글로벌 등 8건은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에서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 2008년 10월말 현재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377건, 경제협력승인은 346건이다.

2008년에도 경제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기업인 및 관계자들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통일농수산물사업단 관계자는 영농협력사업 현장 점검 및 농업협력을 위해 수차례 방북하였고, (주)아천글로벌 관

계지는 종합유통센터 건설 및 농수산물 교역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였다. 바두바투 관계지는 개성 주유소 건설, 안동대마방직은 평양대마방직 사업, (주)일경은 금강산 샘물 사업, (주)케이티엠피는 전자부품 위탁가공, (주)프락코는 휴대폰 부품 위탁가공, (주)제일모직·태승·엘에스케이이는 의류 위탁가공, 한국체인은 판매점 신축 공사, 한국통신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정춘광산 및 풍천지역 시추 관련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중소기업 투자시찰단 일행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을 방문하였다.

개성공단에는 2008년 12월 15일 현재 91개 기업(아파트형 입주기업 29개 포함)이 가동되고 있고, 41개 기업이 공장을 건축 중에 있다. 개성공단에는 37,168명(12월 15일 현재)의 북측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2008년 1~10월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약 2억 958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였으며, 그중 약 3,178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 개시 후 3년 10개월(2005.1~2008.10)간 누적 생산액은 약 4억 8,300만 달러이며, 그중 약 9,214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7년에 34만 5,006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한해 최대 관광객 기록을 세웠다. 2008년 3월 17일부터는 1일 20대 규모의 금강산 승용차 관광이 실시되었고, (주)에머슨 퍼시픽은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골프장을 5월 28일 정식 개장하였다. 관광객 증가 추세는 2008년에도 이어졌으나 7월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은 7월 12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다.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2008년에 19만 9,996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2009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당국간 대

화가 전면 중단되었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폐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남북 경제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거래에서 비상업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거래총액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쌀, 비료 등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태도 및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2009년에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8년의 경색국면 속에서도 남북교역은 2007년 수준 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남북교역은 우리가 북한 상품을 구매하는 반입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완화되지 않더라도 2009년 남북교역(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09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핵심 사안은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 및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 개성공단사업이 남북한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의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어 개성공단으로의 물자 반출입이 제한받고,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주, 공장 건축 등이 지연될 경우에는 남북경협이 위축될 것이다.

• 최수영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문화분야

2008년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당국간 대화의 중단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유지했으며, 체육, 종교, 교육학술 등 분야별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체육분야는 레슬링, 유도, 축구 분야에서 활발한 남북교류가 성사되었다. 특히 체육분야는 남북 상호방문 형태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발전적 추이를 보였다.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3월),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4월), 남아공월드컵 남북축구 경기(6월) 등 3차례의 북한측 방남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남한의 유소년 축구팀 방북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체육분야에 대해 북협력기금지원이 이루어져(3.18) 제주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식대 등으로 1천 200만원이 집행되었다.

종교분야의 남북교류는 지속성을 띠고 진행되었으며,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의 인적교류를 수반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개신교측은 대규모의 방북을 통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 대한예장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 등 157명이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7.15~18)차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방북하였다. 또한 개신교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11.4, 평양, 103명 방북)’를 추진하였다. 남측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북측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이 공동주최한 ‘6·15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도 대규모의 방북을 북한측이 허가 했으며, 북한측 교인 400명 등 비교

적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천주교측은 2002년 10월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96명이 북한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장충성당에서 성당 설립 2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미사(9.22, 평양)’를 갖고 평양과 백두산 등을 둘러보았다.

교육학술분야의 남북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남북역사학자 협의회는 개성에 있는 고려궁성유적 만월대에 대한 제3차 남북공동발굴 조사를 하였다. 남측의 역사학자 10명을 포함해 45명의 공동 발굴단은 11월에서부터 12월에 걸쳐 개성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 남북한 공동 발굴단은 2007년에도 만월대 서부지역에 대한 시굴을 거쳐 1천 평을 본격 발굴한 결과 11동의 건축물 기초와 회랑, 배수구 등을 찾아낸 바 있다. 이외에도 교육학술분야에서는 겨례말큰사전 15차 편찬회의(10.29~30, 개성)와 남북한 통일문학 창간호 공동발간 및 남한 반입(4.29) 등 내실있는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교육학술분야에서는 겨례말큰사전편찬사업(32억원), 개성만월대 발굴사업(3억 6천) 등 협력기금의 집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관광분야는 2008년 하반기 남북관계경색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타격을 받았다. 2008년 6월까지 금강산 관광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7.11) 및 관광 중단(7.12)으로 차질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육로통행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관광 중단을 통보(11.24)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관광을 중단(11.29)했다. 따라서 2008년 말 북한 지역에 대한 관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대북교류사업도 종래 단순지원 중심에서 점차 협력사업으로

심화·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경기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강원도 안변 연어사료공장, 제천시 북고성군 과수농장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진 13개 지자체에서는 총 638억원 규모의 자체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8년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지속성을 보인 남북사회문화교류는 2009년 남북관계의 전반적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당국대화의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회문화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남북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간 육로 통행의 제한과 차단을 내용으로 한 북한의 12.1 조치의 시행으로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경우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주 화요일 출·입경 각 한차례씩만 동해선 육로를 사용할 수 있어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사회문화교류 협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들의 접촉도 직항로나 중국 등을 경유한 항공편으로 평양 등지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측이 남북사회문화교류 관련 인사의 방북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는 바,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예전에 비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측이 체제선전 및 남한내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족공동행사 및 상징적 남북교류에 선별적으로 응하는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조한범 · 통일학술정보센터장

3. 인도주의 사안

가. 대북지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식량과 비료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대북지원은 크게 축소되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여 오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5.19)하였다. 다만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에는 대남 비방 정도 등 북한의 태도, 국내 여론, 북한의 정확한 식량사정 등 3가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5.21).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상반기 중에 옥수수 5만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금년도 대북지원은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5년 3월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정부-국제기구 역할 분담하에 영양 개선, 질병 관리, 건강 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2006년 2월 통일부-WHO간 MOU를 체결하여 WHO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WHO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계속 연장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2007년에 이어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니세프에 407만 달러, WHO에 102만 7천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국내 민간단체들도 2007년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영유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WHO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12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가 82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수가 56개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도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민간단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농업환경(15개 사업), 보건의료(12개 사업), 사회복지(13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총 100억 65백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3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년도 개발협력사업인 합동사업의 경우 2개 사업에 18억 8백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결핵관리사업, 의료인력 교육사업,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산림녹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사업 방식으로 43억 35백만 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금년도에는 일부 민간단체가 아사자 발생 등 인도적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며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하였으나 실제 북한 위기 상황수준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견해가 표출되었다. 또한 북한이 사회적 이완을 우려하여 대내 통제 차원에서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에도 식량의 절대 부족 등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 남북협력기금에 식량과 비료 지원예산이 책정되었다. 먼저 비료 지원 문제를 계기로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될 가

능성이 높다. 비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분배투명성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료가 지원될 경우 호혜적 협력 차원으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지원의 경우 차관에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효과와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식량지원을 위한 당국간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지원에 비추어 분배투명성 수준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정에서도 지원의 효과성과 국민에 대한 책무성 차원에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등 체계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단체 자체재원을 통한 대북지원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농업,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 김수암 ·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나. 이산가족문제

지난해 말 열린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07.11.28~30)에서 남북은 연간 상봉(대면·화상) 규모 확대와 영상편지 분기별 교환 등에 합의함으로써 교류 인원 규모 확대는 물론 상봉방식의 다양화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었다. 한 차례 상봉을 한 가족들이 금강산 특별상봉, 또는 분기별 영상편지 교환을 통해 재상봉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또 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07.10.2~4)을 통해 남북은 “금강산 면회소 완

공에 따라 쌍방 대표 상주 및 상시 상봉 진행”에 합의 하였으며 12월에는 금강산 면회소 남북 양측 사무소가 개소('07.12.7)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합의 내용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큰 진전을 이룬 성과이며 가족상봉에 대한 이산가족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가 다 가고 있는 12월 말 현재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 내용이 이행된 것은 지난 2월 남북 각 20가족씩 영상편지 시범교환사업('08.2.5)이 실시된 것 하나 뿐이다. 지난 8월로 예정되었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소 및 운영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개소된 금강산 면회소 남북 양측 사무소 대표 상주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징표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추진전략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비난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을 뿐이며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은 부정적인 태도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10.20)’ 논평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유엔 대사와 외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유종하씨로 교체한 것에 대하여 ‘인도주의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북한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및 북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마저 완전히 차단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

로 남측 당국에 있다고 강변하였다. 같은 날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육로를 통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지금과 같이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된다면 새해 들어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같이 북측이 인도적 쌀·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교류를 연계한다면 새해 들어 1/4분기중에 직·간접적으로 남북간 접촉 제의를 할 것이며, 이로써 기합의된 상봉·교류 행사와 금강산 면회소 개소·운영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올 한 해 북한당국은 ‘이명박 정부’와의 접촉 및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절하였다. 새해 들어 6자회담이 순항하고 북미관계 개선 및 북중관계 증진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확대된다면 북한에게 있어서는 식량지원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 및 의의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측의 대북 협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산가족문제는 담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북한당국에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순수 인도주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임순희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2008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809명으로 2007년에 비해 10.4% 증가하였다. 중국 내 외교공관을 통한 국내입국 소요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태국 등 동남아를 경유한 입국시도가 2008년에도 증가하였다. 국경없는 인권(HRW),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ISHR) 등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단적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3.27). 한국행을 위해 중국에서 미얀마로 입국을 시도하던 탈북자 집단도 미얀마에서 체포되었다(12.20). 탈북여성이라오스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중국을 거쳐 태국에 불법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집단적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지속되었다. 태국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않고, 이민국수용소에서 재판을 거쳐 한국, 미국 등으로 입국을 허용하여 왔다. 태국으로 불법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수용소의 수용인원이 적정수요 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2008년 초에 매주 75명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태국체류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그러나 태국체류 북한이탈주민 중 미국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장기화되어 2년여까지 소요되었으며, 이와 같이 미국행이 지연되면서 한국행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태국정부는 국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입국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러시아로 입국한 탈북자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발생하였다(10.13).

2007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확산된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의 해외 망명신청이 2008년 초에도 지속되었다. 영국 등 유럽연합국가로의 재이주 사례가 드러나게 되면서, 영국이 우리정부에게 신분확인 등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한국국적 취득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확인을 요청하였

다(7.19). 영국 정부가 한국정착 경력이 있는 탈북자들을 추방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망명처리과정에 있던 탈북자의 상당수가 국내로 재입국하기도 하였다. 탈북자들이 호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호주는 대규모 이주 가능성을 감안하여 난민지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탈북자를 수용하였다. 정부는 국내입국이후 정착지원을 받은 다음 서방 제3국에 위장망명을 신청하는 경우 정착지원금 감액 등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러시아 별목공 출신이 유엔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7.23). 중국 내 체류 탈북자 5명의 미국행을 위해 체코정부가 ‘일시체류’를 허용하였다(7.27). 이는 체코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의 제3국 망명을 위해 ‘일시체류’를 최초로 허용한 사례이다. 1년의 체류여건을 갖춘 미국 입국 탈북자에게 최초로 영주권이 부여되었다. 캐나다에서도 탈북자 4명에게 동시에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인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탈북자 송환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미 상원의원 7명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탈북자를 도우려는 기구들에게 탈북자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7.14). 미국인권단체들은 부시대통령에게 중국에 수감된 탈북자지원활동가 4명 등 중국 내 수감자 2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으로써(7.16), 부시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참석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문제를 제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조

진혜)를 만나 중국체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입국 탈북자(조진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항의 단식시위를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기독교사회책임’ 산하 탈북동호회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영국 인권단체도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판하고 중국 내 탈북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은 올림픽 기간 북-중 접경 교량을 모두 폐쇄하여 탈북자의 입국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내렸다. 중국 내 탈북자에게 태국 등 동남아행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과 탈북자 강제송환 사례가 지속되었다. 대량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군이 병력을 국경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법률 제9조 4항에 근거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로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부에서 단식농성을 하였고, 라이트 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방송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조항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2008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안은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들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태국, 몽골 등 제3국내 탈북자 난민수용소 설치 방안이 논의되었으

나, 관련국들은 한국 측과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으며, 향후 자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적 탈북지구출운동가 석방추진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한·미·일 국회의원들과 중국 내 탈북자지원 운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에 참여한 15개국 30여명 국회의원들은 제5차 총회를 통해 탈북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재미교포 청년도 탈북자돕기 마라톤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본 거주 탈북자들은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는 이유로 북송사업을 지원한 조총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올림픽 이후 태국 등 동남아 유입 탈북자들의 규모가 다시 증가하였다. 동남아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은 방북한 라오스 공안장관과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10.7) 이와 같이 동남아 관련국들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여, 불법입국에 대한 재판 및 처벌이후 제3국 추방의 방식으로 탈북자들의 국내 및 미국 등으로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발생한 베트남 사례와 같은 집단입국 및 자국 이민국 수용소 내 단식 농성 등 소요를 막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고, 2007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보위부가 남한정보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하던 국경지역 간첩활동자를 적발하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12.18), 탈북자 및 가족 등 탈북관련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과 관련

하여 북한 내 인신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환율급등으로 인해 탈북 브로커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탈북자들의 이동이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북한 내 경제난이 악화될 경우 탈북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유북한인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등 28개 탈북단체들이 ‘탈북인단체총연합회’를 창립하였다(3.18).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하면서 국내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북한민주화운동 등이 확대됨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감은 커질 것이며, 탈북자 가족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9년에도 국제사회의 탈북자 강제송환 및 중국 내 처우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며, 탈북자들의 수기 및 영상자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장

라. 북한인권

수령 유일지배체제라는 체제적 특성과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자세로 인해 북한인권실태는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2008년도에도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개별국가, NGO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어 왔다.

북한당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비릿 문타본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

서, 2008년에도 북한당국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과 공식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3.27)는 6월 말로 종료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2009년 6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하였다. 그리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유엔인권제도와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금년도 제63차 유엔총회(12.18)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찬성 94, 반대 22, 기권 63)되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찬성을 넘어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과 함께 51개 공동제안국의 하나로 참여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인권결의안 참여와 관련한 보도자료(11.4)에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고 표명한다. 비록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8년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장기간 인권침해가 존재 혹은 지속하도록 한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impunity)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 차원과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 인권·민주주의지원보고서, 연례인신매매보고서, 연례종교자유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표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난 해에 이어 2008년에도 북한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CPCs)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도 북한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3등급(tiers)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탈북자 72명을 대상으로 종교자유 문제를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창살 없는 감옥-북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한 침해 탈북자 증언(A Prison Without Bars: Refugee and Defector Testimonie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 의회는 2008년 9월 말로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재 승인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통과시켰다. 이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북한인권 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진로와 재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영국 외무성도 ‘2007년 연례 인권 보고서(Human Rights Report 2007)’를 발표(3.28)하였다. 영국 외무성은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1개국을 주요 인권 우려국가로 지정하였다.

금년에도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금년에도 워싱턴에서 개최(4.23~28)되었다. 특히 일본은 ‘남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 행사가 개최(12.10~16)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북 인권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12.10) 6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12.8~14)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문제 해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문제를 포괄하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션 기조연설(3.3)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3.11)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의 인간적,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일부는 2008년 실행계획(3.26)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12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4.16), 분단된 한반도의 핵과 인권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방한 중인 스프린 케림 유엔 총회의장을 접견하는 자리(8.26)에서 “유엔이 탈북자 보호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각별한 관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8.6)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박덕훈 차석대표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되었던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지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북 적대의지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제안국 참여와 10.4 선언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대북정책의 진의를 표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11.12)는 남한의 인권결의 제안 참여를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노동신문(11.18)은 ‘사태 악화를 키질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특히 “결의안에 포함돼 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을 빼도록 암암리에 뒤공작”을 폈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 북한인권 논의가 내부갈등을 야기하고 북한이 반발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유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황우려 의원이 ‘북한인권법안(7.4)’, 황진하 의원이 ‘북한인권증진법안(7.21)’, 홍일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고 제정 필요성에 대해 국내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극히 도발적이며 대결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임명을 연장하는 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09년에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

저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2009년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이행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메커니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9월로 보편적 정례검토의 대상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오바마 신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2008년 새로 채택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면서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종교자유 특별관심대상국, 인신매매 3등급 지정 등 인권유린행태로 인해 북한이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 행태와 제재를 연계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특사가 정규직으로 임명되면서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인권대사 등 한미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비판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인권문제가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09년에도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 남한 내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북한은 이를 부추기며 대남 비난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수암 ·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부록: 2008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정세 일지

- 1.4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에 따른 2차분 상환광물 도착 (인천항)
- 1.13 제3차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 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 1.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 2.4 2008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 (개성)
- 2.5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및 이산가족 영상 편지 시범 교환(판문점)」「금강산 관리위원회」 관련 제2차 실무접촉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 실무접촉(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 2.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 2.19-23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 2.22 남-북-중 3자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 우선 제공분 출항
- 2.26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예선경기 제2차 실무접촉(개성)/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 및 남북 동시 생중계(평양 동평양대극장)
- 3.1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생산 누계 3억 달러 돌파(2월말 기준 잠정치)
- 3.6 개성공단 「자동차 관리규정 시행세칙」 관련 대북 실무협의(개성)
- 3.16-24 ‘08 아시아 주니어 레스링선수권대회’ 북한 대표팀(15명) 방남(제주)
-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 3.20 「자동차 관리규정 시행세칙」 2차 남북실무협의(개성)
- 3.25-26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조사단 파견
- 3.26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경기(상하이)
- 3.27 북측의 철수 요구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측 당국인원 철수
- 3.27-28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WG 남북실무접촉(판문점)/1·4분기 개성공단 도로교통 안전 합동 점검
- 3.27-29 내금강 도로 교량 안전 점검
- 3.31 경공업 원자재 대북수송 마지막 제26항차 출항(인천-남포)
- 4.8 북측 출입제한 요구조치로 열차 운행사무소 직원(통일부) 탑승 없이 화물열차 운행
- 4.10-11 제3차 남-북-중 3자 협의 2단계 회의(베이징)

- 4.23-26 경공업 기술지원(신발 분야) 관련 방북(평양)
- 4.27-28 북핵 관련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분(경량레이 5,000톤 및 강판용 2,689톤) 대북 수송
- 5.10-13 정재돈 전 농민연합 상임대표 등 20명 남북농민단체 대표자 회의 참가(평양)
- 5.13 나무심기 행사 등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방문
- 5.23 6.15 남측위,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협약차 방북(개성)
- 5.30 6.15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도 협력사업』 관련 방북(개성)
- 6.5 경계·에너지 WG 수석대표회의 대비 남북 사전 준비접촉(판문점)
-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경기(평양)
- 6.15-16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 6.16 ‘통일정보센터’ 개소(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 6.19-20 홍순권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팀장 등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제2차 남북 역사용어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개성)
- 6.19-21 장마철 대비 금강산 관광지구 안전 점검 실시
- 6.19-23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북한선수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방남
- 6.21-24 EU 의회 대표단(피그커 한반도 관계위 위원장 등) 방북
- 6.25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2차 6월분, 철강류 2,534톤) 남포 수송
-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대통령, 국회 개원 시정연설 통해 남북대화 제의 및 6.15, 10.4 선언 이행 시사
-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7.12-15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 위해 방북(금강산)
- 7.15 중소기업 투자시찰단 일행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방문
- 7.15-1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등 평양 봉수교회 준공 헌당 예배(평양)
- 7.16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7월분, 환강 1,441톤) 제공(인천항→남포항)
- 7.17 한국중소기업 이업종교류연합회 기업인들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방문
- 7.18 총리실·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점검 평가단 구성/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개성관광 현장 안전 점검 등 위해 방북/불교 교류사업 실무협의 관련 천태종 관계자 방북(개성)
- 7.22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력사업 논의차 방북(평양)/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양의대병원 신축 기술지원차 방북(평양)
- 7.23-26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입찰 품목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 7.24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입찰 품목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 7.2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 결과 브리핑 실시/평화의 숲 관계자, 병해충 방제지원 및 양묘장 점검차 방북(금강산)
- 7.26-3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 평양 인민병원 치과병동 지원 협의(평양)
- 7.28-31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경쟁입찰 품목 인도 목적 방북(단동→남포)
- 7.30 제15차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 남북간 모든 합의에 지지 표명한 최종문서 채택
- 8.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금강산 사건 모의실험 결과 발표
- 8.3 조선인민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 8.5-9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남북 불교도, 불교문화교류 실무협의(평양)
- 8.6-30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등, 평양의대 소아병원 신축 지원차 방북(평양)
- 8.7 6.15 민족문화인 남측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발간 협의 관련 방북(개성)
- 8.9-13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인원, 경평축구 협의 및 체육인 초대소 완공 기념 행사 참석차 방북(평양)
- 8.12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남측 모래운반선 등이 1호(658t),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측 어선과 충돌
- 8.14 남측 모래운반선 등이 1호(658t), 남측 귀항
- 8.18-21 동북야교육문화협력재단 인원, 평양과기대 건립 지원 협의(평양)
- 8.19 민주노동당, 북한 사민당과의 정당 교류 관련 실무접촉(개성)
- 8.20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 남북학술교류 실무협의/어린이재단 해외 사업본부장 등, 유아 지원사업 협의(개성)
- 8.26 남북나눔공동체 관계자, 영유아 이유식 공장 지원 협의(개성)
- 9.3 미 하원 에니 팔리오마뱅어 아태 환경소위원장 일행, 개성공단 방문
- 9.10 도라산평화공원, 개장
- 9.11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국제입찰분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중유 환산 약 1.6만톤 상당 철강류 제공)
- 9.1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10명, 개성지역 양돈장 지원 협의 관련 방북(개성)
- 9.16-30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관계자, 평양 의대병원 소아병동 기술지원 목적 방북(평양)
- 9.23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 남북위원장 접촉(개성)/남북 협력제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등 5명 방북(개성)

- 9.23-27 6.15 남측위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방북(평양)
 9.30-10.4 원불교 관계자, 평양 국수공장 모니터링 실시(평양)
- 10.2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구
- 10.6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 및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관련 실무협의(개성)
- 10.6-8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평양 제1인민병원 치과병원 준공식 참여(평양)
- 10.7-8 통일농수산사업단, 콩시험재배 수확량 조사차 방북(개성)
-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 10.14-18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관계자 6명, 평화 발효콩 빵공장 지원(평양)
- 10.15-18 영유아 이유식 공장 실태점검 관련 남북나눔공동체 방북(평양)
- 10.16 통일부, 제9차 대북지원 민관정책 협의회 개최
- 10.17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창립 4주년 기념식 개최
- 10.20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 개최(평양)
- 10.21 나눔인터내셔널, 검사시약 및 의료품 전달 목적 방북(개성)/제27회 이산가족의 날
- 10.28 국무회의, 남북협력 사업을 할 때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심의, 의결
- 10.29 교육지원사업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북(개성)
- 10.30 남측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 유엔 사무국에 결의안 제출
- 10.31 JTS, 북한 강원도 주민에게 지원할 긴급식량으로 밀가루 500톤(4억원 상당)제공
- 11.3 어린이재단, 인도적 지원사업 협의(개성)
- 11.3-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통일 남북교회 기도회’ 개최(평양)
- 11.4 연탄나눔운동 관계자, 개성지역 주민 연탄지원 방북(개성)/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화해·통일위원회,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6.15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기도회’ 개최(평양)
- 11.4-12.23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개토제(開土祭, 11.4) 및 남북공동 발굴조사(11.4-12.23) 참여
- 11.11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흑돼지 및 감귤지원 협의 방북(개성)
- 11.12 북, 판문점 적십자 전화채널 차단 및 육로 제한·차단 경고/남북 장성금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 남측 군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할 것이라고 통보

- 11.14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의결을 보류해 온 인도적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
- 11.17 통일부,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사 5조약(올사늑약) 규탄을 위한 남북공동 민주자주역사대회’에 참가 차 방북하려던 남측 인사 85명의 방북 불허
- 11.17-30 아천글로벌 유통센터 건설 협의(개성, 금강산)
- 11.18 금강산 관광 10주년
- 11.24 북,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 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
- 11.26 북한의 명승지개발지도총국, 현대아산에게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체류 인원도 현재 200명 선에서 100명 미만으로 감축 통보
- 11.26-29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포 소아병원 입원병동 건축일정 협의(평양)
- 11.28 개성관광·남북열차운행 중지, 경협사무소 철수
- 12.1 「12.1 조치」 관련 통일부 성명 발표
* 12.1 조치: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 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조치(개성공단 남측 체류상주 인원 880명으로 제한)
- 12.4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상시체류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력들의 철수 완료
- 12.8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개최 및 통일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
- 12.14 국회,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 확정, 의결
- 12.15 2008 남북협력기금백서 발간
- 12.30 연탄나눔운동 관계자, 연탄 지원 목적 방북(금강산)

동북아정세 일지

- 1.7-12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방문
- 1.13-16 중국 정부 특사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 방한
- 1.15-18 이상득 국회 부의장 방일 특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 면담
- 1.16-19 박근혜 방중 특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 면담
- 1.23 한-미 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개최(워싱턴)
- 1.30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일행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1.31-2.2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 2.13-14 북·미 제네바 회담 돌입
- 2.17-19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중국, 한국 순방
- 2.19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베이징)
- 2.20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일본 도쿄 순방
- 2.20-22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 방한
- 2.21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천영우, 김계관 외무성 부상 양자회담(베이징)/
남-북-중 3자회담, 에너지 설비 지원 논의
- 2.25 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 2.26-27 라이스 국무장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순방
- 2.28-29 미-중, 군사고위급 회담 개최
- 3.2 러시아 대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선
- 3.5 중,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 3.11 미 국무부, 2007 인권보고서 발표/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제주 방문
- 3.13-14 힐-김계관 제네바에서 회담/중, 제11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부주석 선출
- 3.14 일, 북핵감시 지진계 설치/중, 러시아와 첫 군사합작인 개통/티베트 (라싸),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시위 발생
- 3.15-17 중,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개최
- 3.17-18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모스크바 방문
- 3.18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출범
- 3.22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 당선
- 3.24 일, 북한 미사일 대비 6번째 이지스 구축함 인수
- 3.27 남북, 판문점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접촉 개최/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 상공회의소장 면담
- 4.1-2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 방한
- 4.4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쿄)
- 4.6 부시-푸틴 고별회담(소치)
- 4.8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싱가포르)/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개최
- 4.9 북-미, 양자회담(싱가포르)
- 4.10 남-북-중, 3차분 대북 설비지원방안 합의
- 4.15-19 한-미 정상회담
- 4.21 한-일 정상회담(도쿄)
- 4.22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방북
- 4.25 북-러, 하산-나진 철도 현대화 계약 체결
- 4.26 북-시리아, 핵 협력 발표

- 4.26-29 박의춘 북한 외상, 취임 후 첫 방중
- 4.28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한-미 6자수석대표 회동/세계최대 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Raytheon),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 구축지원 한국군과 계약 체결/한-일, 군사교류 교환각서 체결 추진
- 4.29 성 김, 라이스에 북핵신고 협의 결과 보고/렌잔 대만 국민당 명예 주석-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회동(베이징)
- 5.1 북, 미국에 영변 핵파일 제공키로 잠정합의/한-일, 북핵 6자회담 실무 협의 개최(도쿄)
- 5.2 한-일, 제9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도쿄)
- 5.4 중-일, 이산화탄소 지중매립 기술협력 합의
- 5.6-10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 정상회담
- 5.7 한-베트남, FTA 관세협력관 상호과건 합의
- 5.8-10 북핵신고 문제 실무협의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방북 (판문점)
- 5.10 한-미, 북핵 실무협의
- 5.12 중국 대지진 발생
- 5.14 미국,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 하원 전체 회의 통과
- 5.18-19 한-미-일 6자수석 워싱턴 회동, 북핵 현안 논의
- 5.20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세계철도연맹 서울 총회 참석
- 5.21-23 한-미, 전쟁예비탄약(WRSA) 이양 5차 협상
- 5.23 중-러, 정상회담 개최
- 5.26-31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유럽 3개국 방문
- 5.27 김계관-힐, 주중 미대사관에서 북미회동 시작
- 5.27-29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베이징 방문
- 5.27-30 이명박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 5.29-31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모스크바 방문
- 5.30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양자 회동(베이징)
- 6.3 IAEA, 한국 핵 투명성 공식 인정
- 6.7 북-일, 양국 비공식 실무자 협의 개최(베이징)
- 6.8 재일 탈북 여성, 조총련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 6.10 경제·에너지 WG, 5자 공여국 회의 개최
- 6.10-11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 핵 신고, 불능화 관련 협의차 육로 방북
- 6.11 경제·에너지 협력 WG 수석대표회의(판문점)/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시작
- 6.11-12 북핵 6자수석대표회담 개최(베이징)

- 6.14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쿄)
- 6.17-18 미-중, 제4차 전략경제대화 개최(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
- 6.18 중-일, 동중국해 영해분쟁지역 가스전 공동개발 발표
- 6.26 북,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 6.26-28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 6.27 북, 영변 냉각탑 폭파·해체
- 6.29 라이스 미 국무장관, 쓰촨 방문
- 6.30 한-미,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군사협력위원회(LCC) 회의 개최(워싱턴)/라이스 미 국무장관, 후진타오·원자바오 면담
- 7.1 조지 부시 대통령, 북핵폐기에 북한 예산지원법안 서명
- 7.6 미-일 정상회담 개최
- 7.7-9 G8 정상회의 개최(도야코)
- 7.9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김숙(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김계관(외부성 부상) 회동(베이징)
- 7.10-12 6자회담 수석대표(김숙,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이키 아키다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회담(베이징)
- 7.16 미 상원, 북핵신고 비공개 청문회 개최
- 7.21 제1차 한미 고위급 회담 개최(워싱턴)
- 7.22-2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싱가포르)
- 7.23 한-중, 외교장관회의 개최/한-러, 외교장관 회담 개최
- 8.2 미 상원, 주한미대사 캐슬린 스티븐슨 지명자 인준안 처리
- 8.5-11 조지 부시 대통령, 한국, 태국, 중국 아시아 3개국 순방
- 8.8-24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 8.9 러시아, 그루지아 침공
- 8.14 북, 핵 불능화 중단 선언
- 8.25-26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한-중 정상회담 개최(서울)
- 8.26 북, 핵 불능화 중단
- 8.28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개최(두산베)
- 8.28-29 제2차 한-미 고위급회담 개최(서울)
- 9.1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전격 사임 발표
- 9.2 제3차 한-미 차관급전략대화(워싱턴)
- 9.10 제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제1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베이징)/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 개최
- 9.15 미국망명 탈북자 첫 영주권 획득
- 9.16 한-몽골 총리 공식회담
- 9.18 러, 최신행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블러바' 시험발사

- 9.20 미, 북한을 종교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
- 9.22 미 상원, ‘2008북한인권재승인법안’ 통과
- 9.22-23 한-러 제9차 경제공동위원회(서울)
- 9.23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
- 9.24 북, 핵시설 재가동 방침 IAEA에 통보
- 9.24-25 제3차 한-미 고위급회담 개최(워싱턴)
- 9.25 중, 세 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 발사/한-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 개최
- 9.26 한-러, 광물자원개발, 산업기술협력 합의
- 9.28-10.1 한-러, 정상회담 개최(모스크바)
- 10.1-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검증 원칙 논의(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협의)
- 10.12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북-러 수교 60주년
- 10.16 한-미, 제30차 군사위원회(MCM) 회의 개최(워싱턴)
- 10.17 한-미,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워싱턴)
- 10.24-25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베이징)
- 10.29-30 제4차 한미고위급회담(서울)
- 11.2 당정, 한미 FTA 태스크포스(TF) 구성
- 11.4 미국 대선, 버락 오바마 당선
- 11.7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범죄인정보교환’ 협정 서명/한-미-일 안보토의 개최(워싱턴)
- 11.15 G20 금융정상회의 개최(워싱턴)
- 11.17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 11.17-23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미국 방문
- 11.19 미국 FDA, 중국에 첫 해외사무소 개설
- 11.19-20 제5차 한미고위급회담(호놀룰루)
- 11.23-25 APEC 정상회의 개최(페루)
- 11.24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베이징)
- 11.24-28 성 김 북핵특사, 한, 일 방문 북핵검증 논의
- 12.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도쿄)
- 12.4 미-중 제5차 전략경제대화 개최(베이징)
- 12.9 남북 6자 수석대표 양자회동
- 12.8-11 북핵 제6차 6자회담 개최(베이징)
- 12.12 한-미, 제20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개최(워싱턴)/한-중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베이징)

- 12.13 한-중-일, 정상 회담(후쿠오카)
- 12.18 한-러, 첫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 12.24-26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개최(제주)
- 12.26 중국해양석유유한공사(CNOOC)-대만 국영 정유업체(CPC) 석유 협력협정 체결

북한정세 일지

- 1.1 신년공동사설 발표
- 1.4 공동사설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 개최/외무성 대변인,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 준수 촉구
- 1.8 조선우표사, ‘새날’신문창간 80돌 기념우표 창작발표
- 1.9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73권 출판
- 1.19-22 철도성 대표단(단장: 김용삼 철도상) 방중
- 1.22 호주주재 대사관 폐쇄
- 1.25-6.9 북한 현대미술전, 발트 3국과 러시아 순회 개최
- 1.28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60차 전원회의 개최
- 1.29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7차 전원회의 개최/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1.29-2.2 몽골 경제대표단 방북/프랑스 외무성대표단 방북
- 1.29-2.7 청년동맹대표단(단장: 길철혁 비서), 세계민주청년 총이사회 회의 참가 (포르투갈)
- 1.30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농업근로자 동맹 중앙위원회, 제55차 전원회의 개최
- 1.3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면담
- 2.4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새 총장에 려춘석 대장 임명
- 2.5-2.8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그리스도교 국제토론회 개최(프랑크푸르트)
- 2.12 내각 체육지도위원장에 박학선 임명/몽골,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백두산 협회대표단 방북/북-쿠바, ‘2008-2010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 2.13 2.16 경축 평양시 청소년들의 경축무대 개최
- 2.13-20 제12차 김정일화(花) 축전 개최
- 2.14-4.17 제16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개최
- 2.15-17 국제 피겨축전 개최(평양)
- 2.16 김정일 생일 기념우표 발행
- 2.18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저우언라이 방북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 2.26-28 뉴욕필하모닉, 평양공연

- 3.1 김정은, 류사오밍 주북 중국대사 초청 중국대사관 방문
- 3.4 노동당대표단(단장: 김태중 당부부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차 출국
- 3.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 개선 촉구 발언 비난
- 3.10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결성 8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
- 3.15 북-러, 하산-라진 철도개건 합의문 채택 및 회담록 조인
- 3.18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60주년 기념우표 발행
- 3.19 북-쿠바 단결위원회 연차회의 개최(평양)
- 3.20 김룡연 인민군 차수 사망/북-러, 하산-라진 철도와 라진항 개건 착공 합의
- 3.20-3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프리카 4개국 순방
- 3.27 조선민주여성동맹 제52차 전원회의 개최-로성실(전 부위원장) 위원장 선출
- 3.28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 3.29 외무성, 유엔의 대북인권결의 비난
- 4.1 스웨덴 대사에 리희철 임명
- 4.1-6 백계룡 입업성 당위원회 비서 방중
- 4.2 조선우표사,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 17돌 기념우표 발행
- 4.3 대외문화연락위 대표단(단장: 전영진 부위원장) 미얀마, 중국 방문차 평양 출국
- 4.5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5돌 기념보고회 개최/북측대표, 유엔 군축위 회의에서 핵문제 관련 연설/세계 보건의 날' 행사 개최/유엔 대사에 신선호 임명
- 4.8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태양절 기념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 4.8-15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 방북
- 4.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개최
- 4.10-18 태양절 기념 '제1차 전국예술축전' 개최
- 4.10-22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가
- 4.11 제10차 김일성화축전 개막/고 김일성 주석 96회 생일기념 중앙보고 대회 개최/북-멕시코, '교육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청류관 준공식
- 4.12 옥류관 개건보수 준공식
- 4.15 고 김일성 주석 96회 생일기념, 군 장성 35명에 대한 승진인사 단행
- 4.17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발표 1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 4.20 기네공화국 주재 대사에 리경선 임명
- 4.20-25 북 대표단(단장: 리명산 무역성 부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2차 총회 참석

- 4.22 리병철 공군사령관, 방북 량광레 중국 국방부장 면담/조선원자탄
피해자협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에 허중 점임(현 쿠웨이트주재 대사)
- 4.22-25 루돌프 자이터스 독일 적십자사 총재 방북
- 4.23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118차 IPU총회에서 연설/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북 카메룬 대사 면담/북-중 합작 ‘평양백산
담배합영회사’ 조업식
- 4.24 인민군 창건 76돌 중앙보고대회 및 기념행사 개최/김영남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장, 방북 독일 적십자사 총재 자이터스 면담/북 철도성-
러 철도주식회사, ‘철도협정’ 조인(모스크바)/북-중 공동투자로 평양
백산담배합영회사 설립/북-러, 「나진-하산」간 철도 현대화 사업 관련
계약 체결
- 4.26 외무성 대표단(단장: 공석웅 부상) 유럽 순방 출국/불가리아 사회주의
당 대표단 방북
- 4.26-29 박의춘 외무상 방중
- 4.28 공석웅 외무성 부상, 체코 외무차관과 면담/노동당, 불가리아 사회주의
당 회담
- 4.28-5.2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
- 4.29 노동당·우간단 군사대표단 회담/북한 남양시·중국 투먼시, 보행관광
합의서 체결
- 4.30 제8차 전국노동자체육경기대회 개막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북 이집트대사 면담/브라질 공산당
및 베네수엘라 주체사상연구 대표단 방북
- 5.2 북한 노동당·브라질 공산당, 협조합의서 체결
- 5.3 북-이란 친선행사 개최(평양 친리마문화회관)
- 5.5-6 제10차 평양 의학과학토론회 개최
- 5.5-10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 5.7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단장: 부중 부상) 방북/제3차 건축미학토론회
개회(평양)
- 5.8 북-베트남, 외교 협조 합의서 조인(평양)
- 5.9 방중 노동신문 대표단, 리창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면담
- 5.12-15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
- 5.16 최태복 비서, 방북 포르투갈 공산당대표단(단장: 포르투갈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알바노 누네스) 면담/북-에티오피아,
‘2008-2010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 5.19 민주통고주재 특명전권대사에 조만석 임명/박의춘 외무상, 이란과 몽골
신인특명전권대사 면담
- 5.22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이사장 비슈와나스 방북

- 5.26 인도 외무성 대표단(단장: 엔 라비 비서) 방북
- 5.28 김격식 군참모장, 방북 부룬디 군사대표단 면담/양형섭 부위원장·박익춘 외무상, 인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 5.3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 북한사업설명회 개최(헤이그)/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조총련, 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 회의 개최(도쿄)
- 5.31 북한 외무성, 미 국무부의 '자유·민주주의 신장 보고서' 비난
- 6.1 국제아동절 기념행사 개최
- 6.3 북-중, 세관협조협정 조인(베이징)
- 6.5 세계환경의 날, 민족토론회 개최
- 6.6 보츠와나 대사에 안희정 겸임 보도(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잠비아 대사)
- 6.9 박익춘 외무상,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 유수프 아무다 아부바카르 면담
- 6.9-29 공보위원회 대표단(단장: 강능수 문화상),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제4차 쿠바와의 연대성 아태지역회의의 참가) 방문
- 6.10 외무성, 반테러 의무이행 성명 발표
- 6.11 유엔 공동실사단(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 북한의 식량 사정 현장조사 실시
- 6.16 중국 교통운수부 대표단(단장: 풍정립 부부장), 민항대표단(단장: 이가상 국장) 방북
- 6.17 로두철 내각 부총리, 중국 민항총국 대표단(단장: 리자샹 국장) 면담/북-중, '정기간 자동차운수협정' 체결/'2008 국제정보통신박람회(6.17-6.20)' 참관단 파견
- 6.17-19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 6.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사업개시 44돌 중앙보고대회 개최/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 시진핑 일행 접견/북한 공보위원회·라오스 공보·문화부, '공동 공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 조인
- 6.19 김형준 외무성 부상, 제7차 블록불가담나라 공보상회의의 참가차 베네수엘라 향발/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주북 영국대사 존 에버라드 담화
- 6.21-24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단장: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 방북
- 6.23-25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 도서 전람회 개최
- 6.24-7.1 인민보안성 대표단(단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베트남·라오스 방문
- 6.25 나이지리아대사에 리찬호 겸임(현 가나대사)/'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6.2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퇴임 주북 벨기에 대사와 면담

- 6.27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 6.30 북·라오스, 법률협조조약 체결/캐나다 대사에 신신히 겸임(현 유엔 대사)
- 7.2 라진해운대학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개최
- 7.3 북한 대표단(단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면담
- 7.1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북 핀란드 대사와 담화
- 7.12 룩셈부르크 그리스도교 사회인민당 대표단 방북
- 7.16 최태복 의장, 방북 룩셈부르크 그리스도교사회인민당 대표단 담화
- 7.17 국가문헌국 대표단, 제16차 국제문헌대회 참가차 출국/북·러,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위한 합작회사 설립
- 7.18 내각, ‘국경교두중합무역장관리운영규정’에 관한 결정 채택
- 7.19-8.2 박의춘 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및 이란 비동맹운동(NAM) 회의 참석
- 7.21-29 제11차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최
- 7.22 박의춘 외무상,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싱가포르)
- 7.23 직중 중앙위 제61차 전원회의 개최
- 7.24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
- 7.25 정전협정 55돌 경축행사 진행
- 7.26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74권 출판
- 7.28-8.1 중국공산당 간부대표단(단장: 이경전 중앙당학교 상무부교장) 방북
- 7.28-8.26 베이징 올림픽 11개 종목 선수 63명, 경기·본부인원 71명 등 총 134명 참가
- 7.31 조선혁명박물관 창립 60돌 기념 전국혁명사적부문 학술토론회 개최/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일행 방북/평북 영변건직공장 창립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8.1 EU 의회 글린 포드 의원(영국 노동당 소속) 일행 방북/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 중국 공산당 간부 대표단과 담화/평양교예단, 유럽 개막 공연
- 8.2 김영대 부위원장,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담화
- 8.3 박의춘 외무상,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담화
- 8.4-10.10 ‘아리랑’ 공연(5.1 경기장)
- 8.5 여맹 중앙위 제53차 전원회의 개최/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단장: 알레세이 메르씨야노브 부총사장) 방북
- 8.6 북·러, ‘라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서’ 체결/북·러, 라진-두만강 철도 개보수 합의/북·러, 라진항 컨테이너 처리장 착공식 개최 합의
- 8.7-9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이징올림픽 개막행사 참가 차 방중
- 8.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시진핑 부주석과 담화(베이징)

- 8.9 폴란드 수교 60주년 전시회 개최
김일성, 김정일 백두산밀영 현지지도 20돌 및 정일봉 명명 2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박천건직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8.12 ‘번영하라 조국이어’ 공연 개막
- 8.12-13 정권 창건 6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
- 8.13 김정일 노작발표 2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개최/청년절 기념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
- 8.18 시리아 대사에 최수현 임명/박의춘 외무상, 주북 이집트 ‘이스마일 아브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대사와 담화/라오스 여성동맹 대표단 (단장: 씨싸이 르뎃문쑤) 방북
- 8.20 외무성 대변인, UFG 훈련비난 중통기자회견 개최
- 8.21 김중린 당비서, 라오스 여성동맹대표단과 담화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방문차 출국/여맹·라오스여성동맹대표단 상봉 모임 개최
- 8.24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개시 4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8.26 공업출판사,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조선우표사, 정권 수립 60돌 기념우표 제작/김일성의 속도전청년들격대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8.29 독자자유민주당 출신 연방의회 의원 일행 방북/평양시 방송위원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8.30 김영일 내각 총리, 방북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와 회담
- 9.3 백두산 천지에 화산관측소 설치
- 9.5 북한 정권 수립 60돌 기념 ‘김일성화(花)·김정일화’ 전시회 개막
- 9.9 정권수립 60주년
- 9.1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북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 9.15 방글라데시 대사에 신흥철 임명
- 9.16-19 유럽의회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 9.17-26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최
- 9.17-10.2 북-싱가포르, 전세직항기 운항
- 9.18-10.1 북한 대표단(단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 제63차 유엔총회 참석
- 9.19 외무성, 영변 핵시설 원상 복구 발표
- 9.20 농민 대표단(단장: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베트남 방문
- 9.22-24 정권 수립 60주년 전국의학과학토론회 개최
- 9.22-25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 9.2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 군 대표단(단장: 레반중 총정치국장) 면담
- 9.26 북-케냐 공화국,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북·쿠바, 경제교류 의정서 체결

- 9.27 시리아 군 대표단(단장: 나지브 바라카트 훈련총국장) 방북
 9.29 태국 외부부 대표단 방북
 9.30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대북 투자 대표단 방북
 9.30-10.2 전국 기초식품 전시·발표회 개최
- 10.1-8 제10차 전국 발명 및 신기술 전람회 개최
 10.1-15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실시
 10.2 10.4 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연구토론회 개최(평양)
 10.3 예성강발전소 준공식
 10.4 북 라진-리 하산 철도 개건 착공식/싱가포르 대사에 정성일 임명
 10.7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8 북-몽골, ‘2009-2011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체결(울란바토르)
 10.10 당 창건 기념일
 10.11 테러지원국 해제/종교인협의회대표단, 제7차 아시아종교평화대회 총회 참석(마닐라)
 10.13 북-중, 입업협력 양해비망록 체결
 10.14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평양)
 10.15 북-쿠웨이트, 항공로에 관한 협정 체결
 10.17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개막
 10.20 박의춘 외무상, 나미비아 정부대표단(단장: 마르코 하우스쿠 외무장관) 면담
- 10.20-24 미국 의회대표단(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농업소위원회 소속) 방북
 10.21 북한 노동당-라오스인민혁명당, ‘2008-2010년 협조 및 대표단 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평양)
 10.23 모리셔스 대사에 안희정 임명
 10.23-30 제19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최
 10.28 박성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사망
- 10.29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북-중, 압록강, 두만강의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평양)/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북한 니안 윈 미얀마 외무장관 면담
- 10.29-30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적십자대회’ 개최
 10.31 천리마제강 신형 전기로 완공 보도/핀란드 대사에 리희철 겸임(현 스웨덴주재 대사)
- 10.31-11.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전국청년동맹 초급일꾼 열성자회의’ 개최
- 11.4 제6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
 11.5 북-카타르, 문화협조 협정 체결
 11.6 ‘사회보장법 시행규정’ 채택 보도/김책공대 홍수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도

- 11.6-12.2 외무성 대표단(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네팔 순방
- 11.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란 민족청년조직, 교류·협조 양해문 체결
- 11.13 앙골라 대사에 조만석 임명
- 11.15 조선인민군 공군대표단(단장: 군사령관 리병철 상장) 쿠바 방문
- 11.16 이란주재 대사에 서세평 임명
- 11.17 인도대사에 림희성 임명
- 11.19 방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루쉬코프 모스크바시장과 발레리 야제프 국가회의(하원) 부의장과 회담
- 11.21 유엔 제3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11.23 청진시인민위원회 대표단,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방문/외무성 대표단(단장: 김영일 부상), 네팔 정부수상 담화
- 11.24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과 회담(아스타나)
- 11.25 북·중, 2009년 체육교류의정서 체결
- 11.2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북 류평 중국 국가체육총국장과 면담/박의춘 외무상, 재북 영국 신임대사 피터 휴스 담화
- 11.27-12.2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단장: 무역성 부상 리명산 위원장), 러시아 방문
- 12.1 몬테네그로 대사에 조승주 겸임/레바논 대사에 최수현 겸임(현 시리아 주재 대사)
- 12.2 북-싱가포르,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싱가포르)/북-예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평양)
- 12.6 체육지도위원회대표단(단장: 박학선 위원장) 라오스 방문
- 12.7 유럽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승소
- 12.9-16 북 철도성 조사단,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 12.12 중국공산당친선대표단(단장: 이시항 운남성위 부서기) 방북
- 12.15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오라스콤 텔레콤)
- 12.16 북-체코, '2008-2011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 12.17 북-체코,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 및 보완과 관련한 의정서 조인
- 12.18-19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 개최
- 12.23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12.28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켈기모임 개최
- 12.29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창립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편집 간사: 서은성 연구원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발과정에서 인권이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장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關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윤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1):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정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호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김영윤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박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북한연구실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8~20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